

1151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개인인 경우)

계약자	발주처	박주현 의원실	
	계약상대자	· 성명 : 홍순탁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84길 41 안세빌딩 2층 · 주민등록번호 : ' · 소속 및 직위 : 안세회계법인 이사 · 직장 및 자택전화번호 : - 직장 : '' - 자택 : · H·P번호 : · 통장계좌번호 : , · 예금주명 : · 은행명 :	
계약내용	용역명	법인세 및 소득세 내실화를 위한 제안	
	계약금액	일금 오백만원(₩5,000,000원)	
	계약기간	2016.8.9. ~ 2016.9.25	
	기타사항	◆첨부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개인 통장사본 1부, <u>여론조사개요 or 연구용역보고서 1부,</u> <u>용역결과물 1부(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 번역 결과물 각 1부)</u> ◆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 (기타소득세: 사례금의 4% 지방소득세: 기타소득세의 10% 원천징수 후 입금)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11. 15.

국회의원 박 주 현 (인)

[작성자 한 강 숙 (서명)]



연구용역보고서

1. 목 적¹⁾

세제개편의 핵심 쟁점으로 법인세율 인상 및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세율 인상과 함께 각 세목별 내실화도 필요하다. 법인세 최저한세 제도, 소득세 최저한세 제도, 양도소득 과세제도, 근로소득 과세 면제자 문제 등을 실효성 있게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이 보고서의 목적이다.

2. 계약 내용

- 계약기간 : 2016.8.9.~2016.9.25
- 연 구 자²⁾ : 안세회계법인 홍순탁 회계사

3. 주요 내용³⁾

1) 법인세 과세표준 증가에 따른 실효세율 역전

법인세 과세표준이 올라갈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실효세율 역전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최고구간 최저한세율 인상, 최저한세 미적용 공제대상 대폭 축소,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

2) 고소득자 공제감면 관리 강화

기존의 고소득자 공제감면 관리제도가 모두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사업소득에만 적용되는 최저한세의 전체 종합소득으로의 확대 적용, 소득세 관련 모든 공제감면에 최저한세 적용, 기준비율 대폭 상향 등이 필요하다.

1) 연구용역의 취지나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연구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기재

3) 연구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거나 목차 등을 기재

3) 주식양도소득 세부담 강화

불로소득 성격인 양도소득의 세부담이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다. 대주주 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과세,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중간주주 신설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4) 근로소득 과세면제자 세부담의 기준

근로소득 과세면제자 관련 논의를 생산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총액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세금을 과세면제자로부터 걷는 것이 합리적인지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일용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기준으로 할 때 근로소득 과세면제자에 대한 적정 세부담은 0.5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연구페이퍼>

법인세 및 소득세 내실화를 위한 제안

2016. 9. 25

홍 순 탁 회계사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개인인 경우)

계약자	발주처	박홍근 의원실
	계약상대자	· 성명 : 박태순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 주민등록번호 : 1234567890 · 소속 및 직위 :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소르본느대 언론학 박사) · 직장 및 자택전화번호 : - 직장 : 02-1234-5678 - 자택 : 02-1234-9012 · H·P번호 : 010-1234-5678 · 통장계좌번호 : 12345678901234567890 · 예금주명 : 박태순 · 은행명 : 신한은행
계약내용	용역명	선거방송 보도의 편향성 (18대 대선 및 20대 총선 선거방송 보도실태 보고서)
	계약금액	일금 이백만원(₩2,000,000원)
	계약기간	2016.8.20. ~ 2016.10.20.
	기타사항	◆첨부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개인 통장사본 1부, <u>여론조사개요 or 연구용역보고서 1부,</u> <u>용역결과물 1부</u>(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 번역 결과물 각 1부) ◆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 (기타소득세 : 사례금의 4% 지방소득세 : 기타소득세의 10% 원천징수 후 입금)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10. 20.

국회의원 박 홍 근

[작성자 채 정 임]



(인)

연구용역보고서

1. 목 적¹⁾

19대 총선 및 18대 대선 시기 선거방송 보도를 분석하여 선거방송 심의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계약 내용

- 계약기간 : 2016. 8월~10월

- 연 구 자²⁾ :

·성명 : 박태순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로 131, 한신APT 106-504호

·소속 및 직위 :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소르본느대 언론학 박사)

3. 주요 내용³⁾

- 총선 및 대선 선거방송 보도의 문제점을 Data화하여 분석
- 선거방송의 개선을 위한 법적 문제점을 검토
- 2012년 제18대 대선 방송보도의 편향성을 분석 데이터에 근거하여 지적
- 2016년 제20대 총선 방송보도의 편향성을 분석 데이터에 근거하여 지적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문제점을 검토 및 개선 방안을 제시
- 해외 사례 검토

1) 연구용역의 취지나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연구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기재

3) 연구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거나 목차 등을 기재

선거방송 보도의 편향성

- 2012년 대선 및 2016년 총선 선거방송 보도 실태 보고서 -

2016. 10

인문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 박태순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개인인 경우)

계 약 자	발주처	박홍근 의원실
	계약 상대자	· 성명 : 서명준 · 주소 : · 주민등록번호 : · 소속 및 직위 :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정책위원(베를린자유대 언론학 박사) · 직장 및 자택전화번호 : - 직장 : · H·P번호 : · 통장계좌번호 : · 예금주명 : · 은행명 :
계 약 내 용	용역명	방송의 공정성 개선방안(공영방송의 공정성 실태보고서)
	계약 금액	일금 이백만원(₩2,000,000원)
	계약 기간	2016. 8.20 ~ 2016. 10.20.
	기타 사항	◆첨부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개인 통장사본 1부, <u>여론조사개요 or 연구용역보고서 1부,</u> <u>용역결과물 1부</u>(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 번역 결과물 각 1부) ◆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 (가타소득세: 사례금의 4% 지방소득세: 가타소득세의 10% 원천징수 후 입금)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접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10. 20.

국회의원 박 홍 근 (인)

[작성자 채정임 (서명)]



비송의 공정성 개선 방안

- 공영방송의 공정성 실태 보고서 -

2016. 10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정책위원회 서명준

12-8.

[별지12]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개인인 경우)

계약자	발주처	박홍근 의원실	
	계약 상대자	· 성명 : 박종운 · 주소 :	· 주민등록번호 : · 소속 및 직위 : 동국대학교 부교수 · 직장 및 자택전화번호 : - 직장 : - 자택 : · H·P번호 : · 통장계좌번호 : · 예금주명 : · 은행명 :
계약내용	용역명	원전의 안전 및 개선방안	
	계약금액	500만원	
	계약기간	2016.9.1.~9.30	
	기타 사항	◆첨부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개인 통장사본 1부, <u>여론조사개요 or 연구용역보고서 1부,</u> <u>용역결과물 1부</u>(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 번역 결과물 각 1부) ◆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 (가타소득세: 사례금의 4% 지방소득세: 가타소득세의 10% 원천징수 후 입금)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12 . .

국회의원 박홍근

[작성자 채정임



(서명) *채정임*

연구용역보고서

1. 목 적¹⁾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가동중인 24개의 원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경주 대지진으로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속에서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허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원전의 안전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2. 계약 내용

- 계약기간 : 16.9.1~9.30
- 연 구 자²⁾ :
 - 성명 : 박종운
 - 주소 :
 - 소속 및 직위 : 동국대학교 부교수

3. 주요 내용³⁾

1. 원전 안전성 개선

위치 제한 고시 (인구중심지로부터 거리 등)

1) 연구용역의 취지나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연구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기재
3) 연구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거나 목차 등을 기재

국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 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준에서 준용하고 있는 미국 연방법 10CFR100.11에 제시된 27FR3509를 보면, TID-14944가 아닌 다른 새로운 기준 적용 시 인허가신청자가 그 타당성을 보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 원전에 걸쳐 TID-14944가 아닌 비보수적인 R.G. 1.4 혹은 1.195를 아무런 기준변경 인허가 절차 없이 사용한 것은 규정 위반이다. 또한, 참고로 인도·이집트와 같은 나라도 10만 명 인구 중심지는 원전으로부터 30 km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원전 위치 규정은 이제 외국 규정을 준용할 것이 아니라 다수 호기를 고려하는 등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규정이 인도나 이집트의 규정이 아니므로 불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수호기 안전성평가

미국에서는 이미 10년 전인 2007년도에 KNF Consulting사가 시범적으로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를 수행한 바 있다. 그 결과에 따르면 다수호기의 위험도는 개별 원전의 위험도 총합의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다시 말해, 10개 원전이 있는 고리/신고리 부지의 위험도는 단일호기의 7배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해외 사례를 보면 이미 어느 정도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기술도 있고, 평가 결과 위험도가 단일호기 보다 훨씬 큰 것으로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과정에서 다수호기 안정성 평가도 수행하지 않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타당한 근거가 없다. 우리나라에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를 수행할 기술이 없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허구라 할 수 있다. 국내 기술이 없다면, 우선 신고리 5,6호기 원전의 건설을 중단하고 해외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조속히 안전성 평가를 수행해야 될 것이다.

국내 원전 중대사고 대처 능력

대부분의 국내 가동 중 원전은 중대사고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나마, 후쿠시마 후속조치로 설치한 수소제거장치인 PAR(축매재결합기)가 예측할 수 없는 폭발을 일으킨다고 알려졌다으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유럽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면, 핀란드 로비사 원전은 열출력이 440MW에 불과함에도 대대적인 공사로 중대사고 대처능력을 확보하고 검증을 수행했다. 신고리3~6호기는 미국 AP1000이나 프랑스 EPR의 이중격납건물과는 달리 단일격납건물로서 안전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핀란드 수출형 원전은 강화된 안전요건을 적용하고 이중격납건물을 채용한 것으로 안다. 국내 원전이 덜 안전하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한수원, 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수십 년간 중대사고 연구를 중복적으로 수행해 왔음에도 용융된 핵연료 냉각을 아직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국인가? 이렇게 여러 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연구비만 낭비하고 대책은 마련하고 못하는 것으로 보아 국내 원자력 안전연구와 후쿠시마 후속조치에 대한 재검토와 재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신규로 제정된 원자력안전법의 사고관리 규정은 설계 요건이 아닌 지침서 작성 요건으로서 반쪽자리 규정이다. 원전의 극한상황에 소방차, 전기차, 가스 배기 등 말단 설비를 이용하는 방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원전 시스템 자체의 보강을 통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법과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

계속 운전 안전성 평가

우리나라 계속 운전 관련 규정들은 유럽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와 미국의 인허가갱신 제도를 혼합하여 그 적용에 있어 혼란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게다가 중수로의 경우에는 중수로 규정과 경수로 규정이 혼합되어 적용되어 일관성이 부족하다. 더욱 문제는, 원자로 시설의 계속 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원자력 안전위원회고시 제2012-25호, 2012.1.20.] 제4조(계속 운전 평가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에서는 ‘최신의 운전경험, 연구결과 및 국제수준의 규제요건 반영 시 해당 원자로의 설계 및 운전 특성과 운전경험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신 규정 적용에 대한 예외 규정이 되어 사업자가 규정을 임의로 적용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월성1호기 계속 운전 단계에서 최신 기준의 선택적 적용이라는 논란이 야기된 바 있다. 국내 계속 운전 규정 및 수행 지침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목 차

1. 원전 사고 및 안전성평가 방법
2. 국내 원전 중대사고 대처능력의 한계점
3. 국내 원자로 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준
4. 다수호기 원전 부지 안전성평가
5. 계속운전과 최신기준

원전의 안전 및 개선 방안

2016. 9

동국대학교 박종은

12-81

[별지12]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개인인 경우)

계약자	발주처	박홍근 의원실	
	계약상대자	· 성명 : 최정묵 · 주소 : · 주민등록번호 · 소속 및 직위 : 서울시청 전략소통 자문위원 · 직장 및 자택전화번호 : - 직장 : - 자택 : · H·P번호 : · 통장계좌번호 · 예금주명 : · 은행명 :	
계약내용	용역명	마이크로 생활체육 건강바우처 지리학:중량구편	
	계약금액	일금 오백만원(₩5,000,000원)	
	계약기간	2016. 12. 1. ~ 2016. 12. 15.	
	기타사항	◆첨부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개인 통장사본 1부, <u>여론조사개요 or 연구용역보고서 1부,</u> <u>용역결과물 1부(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 번역 결과물 각 1부)</u> ◆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 (기타소득세: 사례금의 4% 지방소득세: 기타소득세의 10% 원천징수 후 입금)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12. .

국회의원 박 홍 근

[작성자 채 정 임



(인인)
(서명)

연구용역보고서

1. 목 적¹⁾

본 보고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거주 주민들의 생활체육 수요 및 시설이용현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생활체육활성화 방안, 특히 SOC성격의 생활체육 예산을 SIC 즉 사람에게 직접 투자하는 생활체육 정책 방안에 대해 분석하고자 함. 이를 통해 현재 서울시와 중랑구가 준비 중인 생활체육 관련 정책의 수립과 예산의 집행 시 고려해야할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제시하고, 중랑구 소재 민간 체육시설(휘트니스 클럽, 합기도, 태권도 도장) 등과 연계한 시민건강바우처 제도 시범사업을 개발하고 제안하고자 함.

2. 계약 내용

- 계약기간 : 2016.12.1.~12.15.
- 연구자²⁾ :
 - 성명 : 최정묵
 - 주소 : 서울 동대문 제기동 122-480
 - 소속 및 직위 : 서울시청 전략소통 자문위원

3. 주요 내용³⁾

- 생활체육 건강 바우처 방향
 - 민관협력
 - 다양한 계층고려
 - 개인별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앱과 ARS활용)
- 생활체육 건강바우처 검토방안
 - 수혜자의 운동계획서 제출, 계획에 50% 미만의 출석률(분기별)은 지원중단
 - 보건소와 해당지역 민간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강체크, 수혜자 통보 및 권고, 성과 관리 가능
 - 구민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예산 중장기적인 절감효과

1) 연구용역의 취지나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연구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기재

3) 연구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거나 목차 등을 기재

마이크로 생활체육 건강바우처 지리학: 종량구편



2016. 12. 15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개인인 경우)

④

2016. 12. 2.



25/06/21 29/06/21

연구용역보고서

1. 목 적

- 세월호참사 이후 정부는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에 분산됐던 안전기능을 통합해 국민안전처를 출범시킴. 국민안전처는 국민안전과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기관으로서,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발생시 종합적이고 신속한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러한 사회재난의 재난관리 시스템은 미약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또한 바이러스 질환 ‘메르스’가 등장한 2015년, 보건당국은 골든타임을 놓쳐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를 야기함. 초기대응 실패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사태가 발생한 것. 세월호참사, 메르스사태, 유래없는 초유의 지진발생, 구제역 같은 큰 사회재난의 공통점은 신속한 초동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했다는 점임.
-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사회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특수구조대를 적극 활용하고, ICT 신기술을 이용한 국가재난안전망을 이용해 각 부처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재난에 대응하는 등 신속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향후 안전행정위원회의 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2. 계약 내용

- 계약기간 : 2016년 8월 9일부터 2016년 10월 6일까지
- 연 구 자 : **고명희**(한국경영기술포럼 책임연구원)

3. 주요 내용

1) 최근 사회재난 발생 상황

최근 10년간 발생한 사회재난의 건수는 총 56건으로 연 평균 5.6회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건수는 적지만 인명피해는 2,065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824명. 사회재난에 따른 재산피해액은 총 9조 2146억에 달함. 가장 많이 발생한 재난은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로, 10년간 20건이 발생하였고 425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이중 사망자는 128명에 달하고, 재산피해액은 약 2,360억원에 이름.

2) 원전사고 및 복합재난 에 대한 대응체계 필요성

원전사고의 대응체계 마련이 부족하여 사고대응이 미흡하므로, 원자력 발전소 기준의 강화와 안전규제 시스템의 변화 필요함. 특히 복합재난 발생으로 인한 비상전력 배치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비상용 냉각시설이 가동하지 않을 경우의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함. 더불어 초대형 쓰나미에 대한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쓰나미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2차 재난(복합재난)에 대한 준비와 대응이 되어있지 않았음. 특히 지진과 쓰나미에 의해 악화된 작업 환경으로 인한 2차 재난 대응의 어려움을 반영한 체계 마련 필요

3) 향후 폭염대책과 개선방안 및 향후 전망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지난 2014년 7월 발표한 ‘한 달간의 폭염지옥-2020년 폭염 예상 시나리오’ 등을 비교해 볼 때, 폭염 역시 자연재난의 종류에 포함시켜 선제적 대응할 필요. 폭염과 마른장마가 8월 중순까지 계속되어 농산물 물가 급상승의 우려가 있음. 타이어 폭발, 기차선로 변형 등으로 인한 통사고의 발생 등의 가상 시나리오는 예상보다 4년이 앞당겨진 2016년 여름 폭염을 겪으며 정말 2020년의 폭염지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4) 대형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 필요

본 연구에서는 숨은 살인자, 소리 없는 살인자인 OECD 국가 중 압도

적인 3위인 교통사고에 대해 다름. 특히 화물차, 여객버스 등 대형차의 졸음운전은 일반 승용차의 졸음운전보다 치사율이 2배 이상 높이고 위험성이 더 크며, 특히 대형차 졸음운전사고는 올해 발생한 영동고속도로의 사고와 같이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큼.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47건에 그쳤던 전세버스사고 발생수는 지난해 78건으로 2년 전 대비 66% 수준으로 늘어났고, 사상자 숫자 역시 같은 기간 212명에서 362명으로 41% 이상 증가. 지난해 대형차의 교통사고는 12,146건으로 612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치사율이 전체 교통사고 3%를 웃도는 5%를 기록.

교통사고 4건 중 1건은 관광버스나 화물차 같은 대형차와 관련되어 있었고, 화물차나 덤프트럭, 버스 등 대형 차량은 교통사고 결과 측면에서 더 큰 참사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형차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

‘위기의 재난사고’ 대책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6. 10

한국경영기술포럼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개인인 경우)

계 약 자	발주처	백재현 의원실
	계약 상대자	.성명 : 노은임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소속 및 직위 : 한국선진화포럼 선임연구원 .직장전화번호 : .H-P번호 : .통장계좌번호 : .예금주명 : .은행명 :
계 약 내 용	용역명	이북5도위원회 개편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계약 금액	일금 삼백오십만원(W3,500,000원)
	계약 기간	2016. 10. 17. ~ 2016. 12. 7.
	기타 사항	◆첨부서류 : 용역결과물 1부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개인통장사본 1부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12. 15.

국회의원 백재현



조준재

연구용역보고서

1. 목 적

- 해방이후 이북5도위원회의 이북5도지사의 경우 각 도의 주민들이 선출할 수 없으니 대통령의 임명으로 정해진다. 또한 이들은 의전이나 보수에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지사 등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고, 이북5도 위원회에 투입되는 예산은 80억이 넘는다. 이북5도위원회가 과연 분단이후 60년이 지난 현재에도 필요한 조직인지, 현재 실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사업재편의 필요성은 없는지, 이북5도지사들이 차관급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논란이 있음.
-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이북5도위원회의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고 그 사업내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한시적 필요성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진 이북5도위원회의 사업개편을 모색하는데 있음

2. 계약 내용

- 계약기간 : 2016년 10월 17일부터 2016년 12월 7일까지
- 연 구 자 : 노은임(한국선진화포럼 연구원)

3. 주요 내용

1) 이북5도위원회의 주요업무 검토

이북5도위원회는 가) 이북5도등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의 수집·분석, 각종 정책의 조사연구업무 나) 이북도민의 실태 조사 및 생활안정 지원,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교류 사업 지원, 이북도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등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의 주민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다)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 지원 라) 이북5도등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 마) 이북도민 관련 단체의 지도 및 지원 바) 이북도민에 대한 각종 증명 발급업무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2) 북한 이탈주민 지원 사업과의 관계

국내에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의 수는 약 3만명에 이르며, 또한 여성 북한이탈주민은 매년 1000명 이상이 국내로 입국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음. 따라서 국내에 입국하는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북5도위원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을 실행하고 있음.

한반도의 분단관리와 궁극적인 평화적 재통일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서독의 실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통일 이전 동독주민의 서독지역으로의 이주와 그에 대한 서독정부의 지원안정정책을 연구하여 이북5도위원회의 이탈주민사업 재편이 이루어져야 함. 향후 통일이 되기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과의 갈등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3) 기업체 연수사업 관련

2011년부터 시행해 오고있는 기업체 연수사업은 북한이탈주민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청장년층에게 실시되는 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연수생과 참여기업에게 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함으로써 희망직종에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및 숙련을 지원. 이를통해 대한민국사회에 정착한 이탈주민이 국내에 경제적 자립기반을 할 수 있도록 함. 이 사업 수료자 전체의 약 67%가 취업을 하였으며, 매년 수료자의 60%이상이 기업체 연수사업을 통해 취업하고 있음.

4)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등 관련 제도의 보완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 절반 이상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이주를 장려하는 지원 사업의 필요성이 있음. 이북5도위원회가 북한이탈주민들이 각 지방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지원을 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이들의 남한 사회에 동화되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는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을 실행하도록 함.

研究課題 최종보고서

‘이북5도위원회’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6. 12

한국선진화포럼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개인인 경우)

계약자	발주처	백재현 의원실
	계약 상대자	.성명 : 이 혜 령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소속 및 직위 : 한국조세선진화포럼 연구원 .직장전화번호 : .HP번호 : .통장계좌번호 : .예금주명 : .은행명 :
계약내용	용역명	地方所得稅 稅務調査의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계약 금액	일금 오백만원(W5,000,000원)
	계약 기간	2016. 9. 8. ~ 2016. 11. 10.
	기타 사항	◆첨부서류 : 용역결과물 1부 운전면허증 및 개인통장사본 1부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12. 16.

국회의원 백 재 현



작업자 조운재

연구용역보고서

1. 목 적

- 2013.9월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인하하면서 세수보전과 지방세확충을 위해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마련」을 통해 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소득·법인세의 부가세 방식(결정세액×10%)에서 2014년 1월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그에 따라 여러 쟁점들이 나타나고 있음.
- 지방세분야는 세수신장성이 낮은 재산과세 위주로 되어 있어 지금과 같은 부과방식으로는 건전한 지방재정을 기대할수 없는 구조임. 따라서 지방세 구조개편을 위해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함으로써 소득을 기반으로 한 지방의 세입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지방세수의 연계 강화 등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득세가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바뀌면서 나타난 쟁점 중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과세표준 계산방식이 동일한 소득세·법인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각각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중복 세무조사에 대한 논란에 대하여, 지방자치라는 측면에서의 과세자주권 보장, 납세자의 측면에서의 중복세무조사 등에 대한 논점을 정리하고 그 보완방향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음.

2. 계약 내용

- 계약기간 : 2016년 9월 8일부터 2016년 11월 10일까지
- 연 구 자 : 이 혜 령(韓國租稅先進化포럼 主任연구원)

3. 주요 내용

(1)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관련 쟁점

○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전국 공통사항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 질문·검사 및 보고·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함.

○ 국세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기준과세표준으로 보고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정함.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의 무신고·탈세혐의 등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정 근거가 되는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경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세무조사 일원화 관련 쟁점

○ 세무조사 중복은 심각한 행정력 낭비, 조사 받는 기업들의 부담가중, 지방자치단체의 조사능력 부족 문제, 과세당국 간 해석 차이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단일화해야 함. 지자체들이 해당지역의 업체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거나 원할 경우 국세청 조사에 동참을 허용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을 통해 줄일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세 세무조사권한을 남용하면 납세자가 하나의 소득에 대해 국세청과 지자체 양측으로부터 중복 세무조사를 받아 사업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는 국세청과 지자체의 중복세무조사를 원천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재계에서도 꾸준히 주장했던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 일원화 관련 입법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함. 하지만 과세권·징수권은 물론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자체가 세목결정권·세율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상황. 심지어 중앙정부가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마저도 지자체가 아닌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려는 상황을 해결하는 길은 없음.

○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동시다발적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급증 우려는 '13년 말 지방세법 개정 당시에는 법안논의에 참여했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입법미비 사항'으

로서 조속한 시정 필요를 주장함. 전경련은 지자체마다 세무조사 결과를 다르게 내려 기업이 어느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세무조사 부담 급증과 함께 그 결과에 따른 세정혼란도 우려됨.

○ 세무조사권이 동반되지 않은 과세권은 무의미하다는 지자체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대상 소득이 같은 경우에도 국세청, 지자체 모두가 그 소득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들여다볼 경우 납세자에게 이중부담과 이중혼란을 초래하게 됨.

○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및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고 세무간섭을 배제토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

(3) 지방분권 저해하는 지자체 동의없는 독자적 과세권 쟁점

○ 지자체의 동의없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중복 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의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전국 226곳 일선 지자체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음. 지방세 수확보방안으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독자적 과세권을 부여했던 제도를 시행 2년도 안 돼 정책을 지방소득세의 과세권자인 전국 226여곳의 기초자치단체장 동의 없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려 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권한을 위축시키는 것임.

최종보고서

地方所得稅 稅務調查의
제도개선 방안 연구

2016. 11

韓國租稅先進化포럼

2-17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개인인 경우)

계약자	발주처	백재현 의원실
	계약 상대자	·성명 : 채희락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통장계좌 : ·예금주명 : ·은행명 :
계약내용	용역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식조사 및 기능전환을 위한 방안
	계약 금액	일금 오백만원(W5,000,000원)
	계약 기간	2017. 1. 3. ~ 2017. 2. 1.
	기타 사항	◆첨부서류 : 용역결과물 1부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개인통장사본 1부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7. 2. 20.

국회의원 백 재 현



조윤기보장관

연구용역보고서

1. 목 적

- 지난 1980년 헌법 제92조에 의해 민주적 평화통일에 관한 정책을 초당적 범민족적 차원에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창설된 대통령 직속의 헌법상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매우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기구이며, 비록 헌법상 '임의기구'이기는 하지만 전국가적 범민족적 차원에서 볼 때 통일부, 통일준비위원회 등과 함께 평화통일의 핵심기구라 할 수 있음.
- 우리 민족이나 국가에 있어 '평화통일'은 헌법적 의무이고, 민족적 과제이며 정치·경제적 현실을 포함하면서 한국정치에 있어서 다른 어떤 사안보다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국제정치적 차원에서는 냉전으로 인한 분단국 중 유일하게 달성하지 못한 남북한의 통일은 세계평화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임.
-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논쟁을 각 사안별로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음.

2. 계약 내용

- 계약기간 : 2017년 1월 3일부터 2017년 2월 1일까지
- 연 구 자 : 채 희 락

3. 주요 내용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존폐논쟁은 정권교체 시기마다 반복

되고 있다. 그 논쟁의 핵심은 대통령의 정책자문기구로서 본래의 통일정책에 대한 자문·건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왔다가 보다, 국론집약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져가고 있다는데 있음.

- 많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순수 민간영역의 통일정책에 대한 대통령자문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존폐논쟁이 있지만 폐지보다는 이를 본래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임. 개편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조직유형에 있어서 정치위원회형과 시민위원회형의 절충으로 약 1,000여 명의 규모로 통일정책 내지 대북정책에 대한 전문적 정보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임.
- 구체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할 것임. 더불어 대통령이 당연직 의장으로 되어있는 조직형태를 대통령 또는 국회에서 의장을 임명함으로써 독립적 기구로서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연구용역
보고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식조사 및 기능전환 방안

2017. 2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개인인 경우)

계 약 자	발주처	백재현 의원실	
	계약 상대자	.성명 : 고명희 ✓ .주소 : _____ .주민등록번호 : _____ .소속 및 직위 : - ✓ .직장전화번호 : _____ .H.P번호 : _____ .통장계좌번호 : _____ .예금주명 : _____ .은행명 : _____	
계 약 내 용	용역명	학력인정시험의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계약 금액	일금 오백만원(5,000,000원)	
	계약 기간	2017. 8. 9. ~ 2017. 11. 3.	
	기타 사항	◆첨부서류 : 용역결과물 1부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개인통장사본 1부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7. 11. 19.

국회의원 백 재 현



연구용역보고서

1. 목 적

- 검정고시란 정규학교에 진학할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나 학업도중 중도에 이탈하여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계속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발전과 자아실현은 물론 국가의 교육 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교육 평등 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력인정시험에 합격하면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현대사회의 교육에 대한 접근방식의 변화에 따라 검정고시의 성격을 평생교육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는가 아니면 교육의 수월성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검정고시의 출제난이도는 어려운 시험을 추구해야 하는가 아니면 쉬운 시험을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검정고시 본연의 성격은 평생교육적 차원이다. 따라서 학령기 및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시험은 교육의 수월성을 보완하는 차원으로 개선하고, 학령기를 벗어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은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접근하여 검정고시를 이원화된 시험체제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강구함으로써 향후 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2. 계약 내용

- 계약기간 : 2017년 8월 9일부터 2017년 11월 3일까지
- 연 구 자 : 고 명 회

3. 주요 내용

1) 학력인정시험으로서 검정고시의 법적 근거

검정고시의 법적 근거로는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3943호, 2016.2.3. 일부 개정) 제27조의2(학력인정시험) ①항에서 규정한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 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를 삼을 수 있다. 또한 ③항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절에 19개 조항에 걸쳐 명시하고 있다.

2) 학력인정시험으로서 검정고시의 변천 과정

검정고시 제도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를 검정고시 제도의 주요 변천 양상을 중심으로 도입기, 발전기, 안정기로 나누어 시기별 특징을 분석하였다. 즉, 도입기는 1950년 6월 13일 검정고시가 시작된 이래 검정고시 제도가 자리 잡기까지 약 10년간의 시기로 설정하였다. 발전기는 검정고시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많은 성장을 보였던 시기인 1960년대에서,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검정고시의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양상되기 전까지인 1980년대 초반까지의 시기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사회적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 평생교육의 외연이 확대되고, 교육 정책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생김에 따라 검정고시의 역할과 정체성에서도 적지 않은 혼란이 초래되었다. 이에 따라 검정고시가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판과 논의들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 시기를 검정고시의 안정기라고 구분하였다.

3) 학력인정시험으로서의 검정고시에 대한 쟁점

검정고시 제도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해 검토하였다. 첫째, 과연 검정고시의 성격은 평생교육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는가? 아니면 교육의 수월성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이다. 검정고시의 성격은 이 시험 제도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쟁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검정고시의 평생교육적 차원은 검정고시가 가지고 있는 보완 교육의 기능에 근거한다. 당초 검정고시가 생겨난 배경은 개인의 다양한 사정에

따라 정규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국민들에게 학력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까지도 이러한 검정고시의 성격이 많은 응시자에게 받아 들여지고 있다.

둘째, 검정고시의 출제 난이도 문제인데, 검정고시는 어려운 시험을 추구해야 하는가 아니면 쉬운 시험을 지향해야하는가 논의이다. 검정고시 난이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검정고시를 바라보는 입장이 집단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어느 집단은 검정고시가 더 어려운 시험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다른 집단은 더 쉬운 시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차이는 앞의 쟁점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검정고시를 어떠한 성격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의 성격 규정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응시자 층의 특성이 분화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볼 수도 있다.

셋째, 검정고시 시행횟수에 관한 논의이다. 검정고시의 시행 횟수를 증대하여 개방성을 증대하자는 입장, 그리고 평가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엄격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시험 횟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행 횟수 증대는 응시자의 편의성 및 개방성 증대 차원에서 검정고시의 횟수를 조금 더 늘리자는 것이다. 기회 확대의 측면에서는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지만, 행정 및 예산상의 어려움도 고려해야할 사항이므로 현행 2회를 분기별 연 4회 정도로 조정할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연 2회 실시되는 검정고시 횟수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시험 방안(iBT)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4) 검정고시에도 평생학습계좌제와 같은 평생학습 대체가능 프로그램 반영

평생학습 차원으로 이뤄지는 학령기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검정고시는 평생학습계좌제와 같은 대체 가능 프로그램을 대폭 반영함은 물론, 문항의 내용과 수준 또한 개별 교과목의 고유한 학문적 지식체제와는 별도로 사회적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생활 중심적 문항을 중심으로 하는 출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고졸 검정고시는 교육 목표분류학에서 지식, 이해, 적용 단계까지 출제대항으로 삼고 있는데, 이를 심화시켜 분석, 종합, 평가 단계까지 출제대상을 조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학력인정시험의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7. 11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사업자인 경우)

계약자	발주처	백혜련 의원실	
	계약상대자	·상호: (주)리서치DNA ·대표자: 김기수 ·주소: 서울·영등포구 63로 40 1016호	·사업자등록번호: 107-88-29607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사업장전화번호: ·HP번호: ·사업자통장계좌번호: ·예금주명: ·은행명:
계약내용	용역명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관련 정책조사	
	계약금액	일금 오백만원(W5,000,000)	
	계약기간	2016. 11. 5. ~ 2016. 11. 10.	
	기타사항	◆첨부서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사업자통장사본 1부 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 번역 결과물 각 1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 항목의 기재사항 (등록번호:116-83-00045, 법인명:국회사무처, 성명:우윤근, 주소:서울 영등포 여의도 1, 업태:부동산, 종목:임대) ◆용역결과물은 용역비 지급신청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용역비는 회계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입금.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접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11 . 14 .

국회의원 백혜련 (인)

[작성자 정지혜 (서명)]

여론조사 개요

1. 목 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관련하여 여론을 수렴하여
관련 정책수립시 기초자료로 삼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사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ARS전화조사
- 표본크기 : 1,560명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pm 2.5\%$
- 조사일자 : 2015년 11월 05일~06일
- 조사기관 : (주)리서치DNA
- 주요내용¹⁾ : 1) 공수처 신설
2) 검찰 신뢰도
3) 뉴스 선호채널

3. 결과 및 방향

-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수처 신설에 대해 찬성(87.7%)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약 10명 중 7명의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겠다(69.1%)고 응답하였고, 검찰을 신뢰한다는 의견은 10.6%로 낮게 나타났다.
- 선호하는 뉴스채널은 JTBC 53.7% > KBS 11.6% > YTN 11.5% > MBC 5.3% > SBS, TV조선 4.3% > MBN 3.9% > 채널A 3.0% 順으로 조사되었다.

1) 여론조사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		20161108-10000000-69274790	
공급자	등록번호	107-88-29607		중사업장번호		등록번호	116-83-00045	
	상호(법인명)	주식회사 리서치디앤에이		성명	김기수	상호(법인명)	국회사무처	
	사업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0, 1016호(여의도동, 라이프오피스텔)				사업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업태	서비스	종목	여론조사의	업태	부동산	종목	임대
	이메일					이메일		
수급받는자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수정사유		
2016/11/08		4,545,455		454,545				
비고								
월	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11	08	정책설문조사(백혜련 의원)				4,545,455	454,545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이 금액을 (청구) 함		
5,000,000		5,000,000						



본 인쇄물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또는 전송 입력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발급사실 확인은 상기 홈페이지의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제3자 발급사실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백혜련의원실>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관련 정책조사 보고서

2016. 11. 08.

(주)리서치DNA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개인인 경우)

계 약 자	발주처	백 해 련 의원실	
	계약 상대자	· 성명 : 김 일 한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소속 및 직위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 · 직장 및 자택전화번호 : - 직장 : - 자택 : · H·P번호 : · 통장계좌번호 : · 예금주명 : · 은행명 :	
계 약 내 용	용역명	남북경협의 안정성 및 지속성 강화방안 연구	
	계약 금액	일금 사백만원(₩4,000,000원) \	
	계약 기간	2016. 6. 10. ~ 2016. 7. 10.	
	기타 사항	◆첨부서류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개인통장사본 1부, <u>연구용역보고서 1부,</u> <u>용역결과물 1부</u> ◆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 (가타소득세: 사례금의 4% 지방소득세: 가타소득세의 10% 원천징수 후 입금)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접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12 . 1 .

국회의원 백 해 련

[작성자 정 지 혜 (서명)]



연구용역보고서

1. 목 적¹⁾

- 본 연구의 목적은 2010년 이래로 6년 째 추진되고 있는 남한식 대북경제제재인 5.24 조치의 영향과 결과를 분석하고 그것의 실제적인 효용성을 평가하는 것임.
-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등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된 5.24조치는 처음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켰음.
-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처방에 대한 분석·평가·성찰이 없이 2016년 초 개성공단 폐쇄 및 금융·해운 통제의 형태로 남한 정부의 대북경제제재는 더욱 확대되었음.

2. 계약 내용

- 계약기간 : 2016.10.04. ~ 2016.11.30
- 연 구 자²⁾ : 김일한 박사

3. 주요 내용³⁾

1장 서론	1
1절 연구목적	1
2절 연구방법 및 범위	2

1) 연구용역의 취지나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연구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기재

3) 연구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거나 목차 등을 기재

3절 연구내용 및 구성	3
2장 정치적 문제의 경제적 처방: 대북경제제재와 효과성	5
1절 경제제재에 대한 이론적 고찰	5
1. 경제제재의 개념, 목적, 내용	5
2. 경제제재의 종류와 효과성	7
2절 대북경제제재의 현황	16
1.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	16
2. 남한의 대북경제제재	26
3절 대북제재의 현실적 효과성 분석	30
1.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의 상실	30
2. 북한 무역구조의 변화와 북·중 교역의 심화	33
3. 개성공단의 변화와 불안정성	39
3장 남북경협 재개 이후 안정성·지속성 강화 방안	41
1절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 강화 방안	41
1. 기존 일반교역·위탁가공교역의 한계	41
2. 일반교역·위탁가공교역 구조의 재구성 및 제도화 방안 ..	47
2절 개성공단의 경제성 확보와 국제화 방안	53
1. 해외 경제협력지대 사례 분석	53
2.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구상과 한계	78
3. 국제적 경제협력지대로서 개성공단의 발전방안	87
4장 결론 및 요약	100

남북경협의 안정성 및 지속성 강화방안 연구

대북제재의 경제적 결과 분석 및
남북경협의 안정성 · 지속성 확보방안 검토

김일한 (동국대학교)

국회의원 백혜련

128

[별지11]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사업자인 경우)

계약자	발주처	변재일 의원실
	계약상대자	· 상호:(주)조원씨앤아이 · 사업자등록번호 : 212-81-93950 · 대표자:김대진 · 법인등록번호 or 대표자주민번호: 110111-4528216 · 주소 : · 사업장전화번호 : · H·P번호 : · 사업자통장계좌번호: · 예금주명 : · 은행명 :
계약내용	용역명	단통법 관련 국민인식 여론조사
	계약금액	일금 오백만원(₩5,000,000원)
	계약기간	2016. 10. 1. ~ 2016. 10. 30.
	기타사항	◆첨부서류 : 전자세금계산서(과세사업자일 경우) 또는 계산서(면세사업자일 경우) 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사업자통장사본 1부 여론조사개요 or 연구용역보고서 1부, 용역결과물 1부(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 번역 결과물 각 1부) ◆전자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 항목의 기재사항 (등록번호:116-83-00045, 법인명:국회사무처, 성명:박형준, 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업태:부동산, 종목:임대) ◆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11. 1.

국회의원 변재일



[작성자 이수현 (서명)]

단통법 관련 국민인식 여론조사 개요

1. 목 적¹⁾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이행 이후 소비자로서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통신기기 구입비용 및 통신비 절감효과 등에 대해 조사하여 향후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길잡이로 삼고자 함

2. 주요 내역

- 조사대상 :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 조사방법 : 유무선전화 RDD ARS
- 표본크기 : 1000명
- 표본오차 : 3.1%point
- 조사일자 : 2016년 10월 14일~16일
- 조사기관 : (주)조원씨앤아이
- 주요내용²⁾ :
 - 단통법 인지도
 - 단통법 이해도
 - 단통법 시행 후 핸드폰 구매 경험
 - 시행전 대비 핸드폰 구입비용
 - 시행전 대비 통신비용

3. 결과 및 방향³⁾

- 우리나라의 휴대폰 가입자 수는 약 5,800만명으로 전 국민이 휴대폰 소비자라 해도 과언이 아닌 현실. 국민전체가 휴대전화 가입자임에도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이전까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신들이 구입하는 휴대

1) 여론조사 목적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기재

2) 여론조사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3) 여론조사 결과에서 도출될 수 있는 입법 및 정책개발 방향 등을 제시

전화의 구입비용에 대해 실제로 알 방법이 없었음.

- 단통법은 통신기기에 통신사 등에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을 제한 원금을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휴대폰을 구입하거나 정보로 활용하게 하는 것임. 하지만 실행 만 2년이 지난 지금 휴대전화 구입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 따라서, 2년이 지난 지금 많은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를 바꾸었을 것으로 예상하여, 단통법이 실제 국민들에게 어떤 효용을 주고 있는지 이 조사에서 확인하고자 하였음.
- 조사결과, 단통법 자체에 대한 인지도는 68.8%로 국민 10명 중 7명을 알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특히, 20대에서 40대 까지는 80%이상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령층인 60대 이상에서는 인지도가 34.1%에 불과하였음.
- 인지여부와 별개로 단통법의 개념에 대한 이해 정도는 잘안다는 응답이 21.5%, 조금안다는 응답이 40.1%로 단통법의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국민들이 60%이상에 달하나,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도 40%에 달해 매우 많은 수의 국민들이 단통법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20대에서도 단통법에 대한 이해가 3,40대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20대 초,중반까지는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의 비율이 낮아 휴대전화 기기를 자신이 직접 구입하지 않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음.
- 단통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 국민들의 75.3%가 새롭게 휴대전화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들 중 63.7%는 핸드폰 구입비용이 상승했다고 응답했으며, 하락했다는 응답은 5.8%에 불과하였음. 저연령층일수록 구입비용이 상승했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아지는데 상대적으로 고가인 최신 기종을 선호하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지만, 청년들의 경제력이 중장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상폭을 크게 느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추후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통신요금도 상승했다는 의견이 46.8%로 절반에 가까운데 반해, 하락했다는 응답은 7.9%에 불과해 통신요금에 대한 인하효과도 없는 것으로 보임.
- 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단통법을 손질하여, 취약층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통신비 및 휴대전화 구입비용을 유인할 법안마련의 근거로 삼고자 함.

전자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보관용)					승인번호		20161209-41000042-65205219		
공 급 자	등록번호	212-81-93950	종 사 업 장 번 호		공 급 받 는 자	등록번호	116-83-00045	종 사 업 장 번 호	
	상 호 (법인명)	조원씨앤아이	성 명 (대표자)	김대진		상 호 (법인명)	국회사무처	성 명 (대표자)	우윤근
	사업장 주 소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58 1008호(여의도동,삼 도오피스텔)				사업장 주 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업 태	전문서비스업,인 문및사회과학개발업	종 목	정치컨설팅,한국정치 및사회여론연구,광고		업 태	부동산	종 목	임대
	담당자명	김대진	연락처	02-477-1368		담당자명		연락처	
과 세 유 형					일반		수 정 사 유		
작 성 일 자		공 급 가 액			세 액		비 고		
2016/12/09		4,545,455			454,545				
월	일	품 목	규 격	수 량	단 가	공급가액	세 액	비 고	
12	09	단통법관련 국민인식 여론조사				4,545,455	454,545		
합 계 금 액		현 금	수 표	어 음		외상미수금		위 금액을 청구 함.	
5,000,000									

※ 본 세금계산서는 부가세법에 의하여 발생한 전자세금계산서이며, 전자서명법에 의거한 전자인증 서명으로 인감날인이 없어도 법적효력을 갖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212-81-93950

법인명(단체명) : 주식회사 조원 씨앤아이

대표자 : 김대진

개업년월일 : 2011년 02월 01일 법인등록번호 : 110111-4528216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008(여의도동, 삼도오피스텔)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008(여의도동, 삼도오피스텔)

사업의종류 : ☒업태 전문서비스업 ☒종목 정치컨설팅
출판업 기타서적출판
소매 전자상거래업
서비스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인문및사회과학개발업 한국정치및사회여론연구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서비스업 광고대행업
(별지 출력)

교부사유 : 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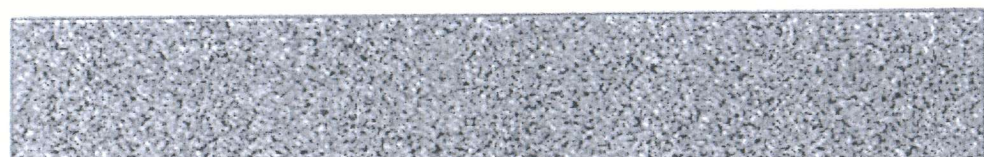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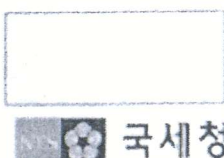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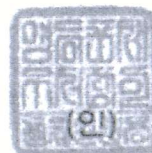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 여() 부(V)

전자세금계산서 전용메일주소 :

2014 년 07 월 02 일

영등포 세무서장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 단통법 관련 국민인식 여론조사 -

2016. 10. 24

JoWōn c&I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삼도빌딩 10층

T:(02)477-1368 / F:(02)487-1368

[별지12]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개인인 경우)

	발주처	변 재 일 의원실
계약자	계약 상대자	• 주민등록번호 : _____ • 성명 : 권오상 • 소속 및 직위 :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 • 주소 : _____ • 직장 및 자택전화번호 : _____ - 직장 : _____ - 자택 : _____ • H·P번호 : _____ • 통장계좌번호 : _____ • 예금주명 : _____ • 은행명 : _____
	용역명	4차 산업혁명과 ICT·미디어
계약내용	계약 금액	일금 오백만원(₩5,000,000원)
	계약 기간	2016. 11. 1. ~ 2016. 11. 30.
	기타 사항	◆첨부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개인 통장사본 1부, <u>여론조사개요 or 연구용역보고서 1부,</u> <u>용역결과물 1부(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 번역 결과물 각 1부)</u> ◆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 (가타소득세: 사례금의 4% 지방소득세: 가타소득세의 10% 원천징수 후 입금)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12. 1 .

국회의원 변 재 일



[작성자 이 수 현 (서명)]

연구용역보고서

1. 목 적¹⁾

- 16년 1월 제46회 다보스포럼에서는 인류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접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강조
 -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기술수준, 교육수준, 법·제도적 측면에서 4차산업혁명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력을 25위 수준으로 평가
- ICT 강국임을 자부해 왔지만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의 충격에 얼마나 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변화를 어떻게 우리것으로 만들어 승자가 될 수 있을지 판단해 보기 위한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

2. 계약 내용

- 계약기간 : 2016. 11. 1 ~ 2016. 11. 30
- 연 구 자²⁾ : 미디어미래연구소 방송통신정책센터 센터장 권오상

3. 주요 내용³⁾

- [첨부] 목차 참조

1) 연구용역의 취지나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연구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기재

3) 연구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거나 목차 등을 기재

목 차

I. 배 경	1
II. 미디어 환경 변화 분석	3
1. 미디어 이용 트렌드 변화	3
2. 新미디어 서비스 성장 가능성	6
3. 글로벌 경쟁력 제고 필요성	7
III. 4차 산업혁명의 대두	8
1. 정 의	8
2. 특 징	9
IV. 4차 산업혁명 혁신사례	10
1. 3D 프린팅	10
2. 스마트공장	11
3. 인터넷 플랫폼 경제	13
4. 프로비스의 확대	15
V. 주요국 정책현황	17
1. 독일 - Industry4.0	17
2. 미국 - 혁신제조지원정책, 산업인터넷	19
3. 중국 - Made in China 2025	24
4. 일본 - 일본재흥전략, 로봇신전략	26
VI. 파급효과	30
1. 경 제	30
2. 사 회	32
3. 문 화	35
4. 행 정	37

4차 산업혁명과 ICT·미디어

2016. 11. 30

I. 배경	1
II. 미디어 환경 변화 분석	3
1. 미디어 이용 트렌드 변화	3
2. 新미디어 서비스 성장 가능성	6
3. 글로벌 경쟁력 제고 필요성	7
III. 4차 산업혁명의 대두	8
1. 정의	8
2. 특징	9
IV. 4차 산업혁명 혁신사례	10
1. 3D 프린팅	10
2. 스마트공장	11
3. 인터넷 플랫폼 경제	13
4. 프로비스의 확대	15
V. 주요국 정책현황	17
1. 독일 - Industry4.0	17
2. 미국 - 혁신제조지원정책, 산업인터넷	19
3. 중국 - Made in China 2025	24
4. 일본 - 일본재흥전략, 로봇신전략	26
VI. 파급효과	30
1. 경제	30
2. 사회	32
3. 문화	35
4. 행정	37

121

[별지12]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개인인 경우)

	발주처	변 재 일 의원실	
계약 자	계약 상대자	· 성명 : 이동우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 - / 변호사 · 소속 및 직위 : 법률사무소 호연 · 직장 및 자택전화번호 : - 직장 : - 자택 : · H·P번호 : · 통장계좌번호 : -- · 예금주명 : · 은행명 : , , -	
계약 내용	용역명	FTA 협정이행 및 향후 FTA 확대 추진 등을 위한 국내 제도개선방안	
	계약 금액	일금 오백만원(₩5,000,000원)	
	계약 기간	2016. 9.1 ~ 2016. 10.1.	
	기타 사항	◆첨부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개인 통장사본 1부, <u>여론조사개요 or 연구용역보고서 1부,</u> <u>용역결과물 1부(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 번역 결과물 각 1부)</u> ◆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 (기타소득세: 사례금의 4% 지방소득세: 기타소득세의 10% 원천징수 후 입금)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12. 13.

국회의원 변 재 일



[작성자 이 수 현 (서명)]

연구용역보고서

1. 목 적¹⁾

- FTA 협정이행 및 향후 FTA 확대 추진 등을 위해 국제기준에 맞춰 국립전파 연구원의 인정 및 인증업무를 분리하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 추진 필요
- ICT 강국임을 자부해 왔지만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의 충격에 얼마나 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변화를 어떻게 우리것으로 만들어 승자가 될 수 있을지 판단해 보기 위한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

2. 계약 내용

- 계약기간 : 2016. 9.1 ~ 2016. 10.1.
- 연 구 자²⁾ : 이동우 법률사무소 호연 변호사

3. 주요 내용³⁾

□ 배 경

- FTA 협정이행 및 향후 FTA 확대 추진 등을 위해 국제기준에 맞춰 국립전파 연구원의 인정 및 인증업무를 분리하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 추진 필요

※ APEC TEL MRA 2단계 체결을 위한 전파법 개정안 입법예고 필요하고, FTA 체결 국가별 인정과 인증 분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1) 연구용역의 취지나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연구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기재

3) 연구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거나 목차 등을 기재

☐ 주요 내용

- FTA/MRA 협정문 및 관련 국제기준(ISO/IEC 17011) 검토를 통해 적합성평가 선진화 방안 및 전파법령 개정안 마련

- 국립전파연구원에 인정기구를 설립하고, 인증기관을 민영화(1~2개)

☐ 한-미 FTA 협정문('12.3.15 발효)

◆ 협정문 제9.5조

- 5. 각 당사국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의 통신장비 적합성평가를 위한 상호인정협정(1998)의 제2 단계를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제2단계 이행을 위하여 자국의 법령 개정안의 공고를 공표할 것이다.

- FTA협정문에 따라 방통위는 미국과 APEC TEL MRA 2단계 이행을 위한 전파법령 개정안을 '13.3월까지 입법예고 해야 했으나, 현재 미진행 중에 있음

※ APEC TEL MRA : 상대국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1단계), 인증서(2단계)를 자국에서 수용

☐ APEC TEL MRA 협정문

◆ 7. RECOGNITION OF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AND MUTUAL ACCEPTANCE OF THE RESULTS OF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Under the conditions and procedures specified in the Phase I or Phase II Procedures, a Party will recognize the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designated by another Party's Designating Authority or accredited by an accreditation body operating under a separate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and accept the results of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performed by those bodies.

- MRA가 체결되면 상대국에서 수용할 적합성평가기관(시험·인증 기관)을 지정 또는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함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은 現 지정체계 유지 또는 인정체계로 전환(인정기구 설립) 중 선택 가능

◆ **APPENDIX A: DESIGNATION AND MONITORING REQUIREMENTS FOR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B. DESIGNATION OF TESTING LABORATORIES

1. Requirements for a Designating Authority or Accreditation Body.

- a) A Designating Authority selected by an exporting Party will be capable of using the requirements and conditions of ISO/IEC Guide 58 to the maximum extent necessary to accredit testing laboratories.
- b) Any accreditation body appointed will meet the requirements and conditions of ISO/IEC Guide 58.

2. Requirements for Designating Testing Laboratories

- a) The testing laboratory will be accredited against ISO/IEC Guide 25 in conjunction with the Technical Regulations specified for Phase I Procedures

C. DESIGNATION OF CERTIFICATION BODIES

1. Requirements for a Designating Authority or Accreditation Body

- a) The Designating Authority selected by an exporting Party will be capable of using the requirements and conditions of ISO/IEC Guide 61 to the maximum extent necessary to accredit certification bodies.
- b) The accreditation body appointed will meet the requirements and conditions of ISO/IEC Guide 61.

2. Requirements for Designating Certification Bodies in the Area of Equipment Certification

- a) The certification body will be accredited against ISO/IEC Guide 65 in conjunction with the Technical Regulations specified for Phase II Procedures

○ 시험기관, 인증기관, 적합성평가기관 지정/인정기관은 각각 관련 국제기준 (ISO/IEC)을 만족해야 함

- 시험기관: 17025, 인증기관: Guide 65, 인정기구(or 지정기관): 17011

※ 현재 ISO/IEC Guide 25는 17025, ISO/IEC Guide 58과 61는 17011로 개정 되었음

□ ISO/IEC 17011 국제기준

◆ 4.3.6 The accreditation body shall not offer or provide any service that affects its impartiality, such as

- a) those conformity assessment services that CABs perform, or
- b) consultancy.

4.3.7 The accreditation body shall ensure that the activities of its related bodies do not compromise the confidentiality, objectivity and impartiality of its accreditations. A related body may, however, offer consultancy or provide those conformity assessment services the accreditation body accredits, subject to the related body having (with respect to the accreditation body)

- a) different top management for the activities described in 4.2.5,
- b) personnel different from those involve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of accreditation,
- c) no possibility to influence the outcome of an assessment for accreditation, and
- d) distinctly different name, logos and symbols.

○ 인정의 신뢰성·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정기구와 적합성평가기관 간 이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 기관은 분리되어야 함

- 조직 분리 조건 : 적합성평가기관이 인정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도록 최상위 관리자, 업무 수행자 및 기관명·로고 등이 달라야 함

※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가입기관(71개) 중 정부 기관은 48개이며, 중국은 인정기구 및 적합성평가기관을 모두 정부에서 운영 중

FTA/MRA 및 국제기준 검토 결론

- ① 한-미 FTA협정이행 및 APEC TEL MRA 2단계 체결을 위해 방통위 적합성평가체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되어야 함
- ② '13.3월까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정/인정과 인증업무를 분리하는 전파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필요
- ③ 국립전파연구원 지정업무의 국제기준화 또는 인정기구 신설 필요

FTA 협정이행 및 향후 FTA 확대 추진 등을
위한 국내 제도개선방안

2016. 10. 07.

196

[별지12]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개인인 경우)

계약자	발주처	변재일 의원실	
	계약 상대자	· 성명 : 이동환 · 주소 :	· 주민등록번호 : · 소속 및 직위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 직장 및 자택전화번호 : - 직장 : - 자택 : · H·P번호 · 통장계좌번호 : · 예금주명 : · 은행명 :
계약내용	용역명	ICT분야 TPP TBT협정 분석	
	계약금액	일금 오백만원(₩5,000,000원)	
	계약기간	2016. 9. 1. ~ 2016. 10.1	
	기타 사항	◆첨부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개인 통장사본 1부, <u>여론조사개요 or 연구용역보고서 1부,</u> <u>용역결과물 1부(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 번</u> <u>역 결과물 각 1부)</u> ◆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 (기타소득세: 사례금의 4% 지방소득세: 기타소득세의 10% 원천징수 후 입금)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12 . 20 .

국회의원 변재일 (인)

[작성자 이수현 (직명)]

연구용역보고서

1. 목 적¹⁾

- 우리나라는 최근 경제권역별 FTA를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FTA 협정문에는 회원국들간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TBT분야는 체결 당사국들간의 상품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으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인정, 시장감시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특히 TBT 분야 IT제품에 대하여 TBT 핵심요소인 적합성평가 및 상호인정 등에 관한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향후 국내 IT산업의 비용을 최소화하며 편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아울러 최적의 협상안을 바탕으로 IT 분야 산업에 미칠 파급효과 및 국내 적합성평가 제도에 관한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2. 계약 내용

- 계약기간 : 2016. 9. 1. ~ 2016. 10.1
- 연 구 자²⁾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이동환

1) 연구용역의 취지나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연구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기재

3. 주요 내용³⁾

○ 국내외 적합성평가제도 현황 분석

- 국내 전파법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근거한 적합성평가제도 현황 분석
- 미국, 일본, EU, CB Scheme 적합성평가제도 현황분석

○ 주요 FTA TBT 협정문 분석

- FTA TBT 체결 일반현황
- 기체결 한-미, 한-EU FTA TBT 협정문 분석
- 적합성평가관련 MRA 개념 및 추진현황

○ 미체결 TPP TBT 분야 협상문 분석

- EMC 기술규정 관점에서의 협상문 분석
- 암호사용 ICT 제품 협상문 분석
- 지역간 협력 규정 분석

3) 연구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거나 목차 등을 기재

ICT분야 TPP TBT 협정 분석

2016. 12. 07.

목 차

I. 연구 개요	1
II. 국내의 적합성평가제도 현황	3
1. 적합성평가 개요	3
2. 국내 적합성평가제도 현황	8
3. 국외 적합성평가제도 현황	22
III. 기체결 FTA TBT 협정문 현황	89
1. 우리나라 FTA TBT 체결 일반현황	89
2. 적합성평가 절차에 관한 기체결 TBT 주요내용	104
3. 적합성평가관련 MRA 개념 및 추진현황	113
IV. 미체결 TPP FTA TBT 협상문 현황	119
1. TPP TBT EMC 규범 내용 및 분석	119
2. 암호 사용 ICT 제품 규정 내용 및 분석	127
3. ICT분야 지역협력 활동 규정 내용 및 분석	130

197

[별지12]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개인인 경우)

계 약 자	발주처	변 재 일 의원실	
	계약 상대자	· 주민등록번호 : · 소속 및 직위 : · 직장 및 자택전화번호 : - 직장 : - 자택 : · H·P번호 : · 통장계좌번호 : · 예금주명 : · 은행명 :	
계 약 내 용	용역명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에 대한 소비자관점에서의 분석	
	계약 금액	일금 사백삼십칠만원(₩4,374,000원)	
	계약 기간	2016. 11.1 ~ 2016. 11.30	
	기타 사항	◆첨부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개인 통장사본 1부, <u>여론조사개요 or 연구용역보고서 1부,</u> <u>용역결과물 1부(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 번</u> <u>역 결과물 각 1부)</u> ◆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 (기타소득세: 사례금의 4% 지방소득세: 기타소득세의 10% 원천징수 후 입금)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12. 20 .

국회의원 변 재 일



[작성자 이 수 현 (서명)]

연구용역보고서

1. 목 적¹⁾

- 지난 2014년 제정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단통법')이 제정 이후 단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법 적용 과정에 소비자 권익이 상당수 침해되고 있는 등의 여러 부작용이 있음.
- 이에 사업자 중심의 논리에서 탈피하여 진정으로 소비자 권익을 위한 단통법 개정을 위해, 객관적 잣대의 시장분석과 소비자인식조사를 통해 단통법 개정안을 소비자 관점에서 분석해보고자 함.

2. 계약 내용

- 계약기간 : 2016. 11.1 ~ 2016. 11.30
- 연 구 자²⁾ :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3. 주요 내용³⁾

- 1) 현행 단통법의 문제점 분석
- 2) 단통법 시행 전후 실제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시장의 변화 및 소비자 권익 관련 개선 필요사항 지적.
- 3) 현재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있는 단통법 개정안 내용 비교 분석
 - 이를 통하여 현재 국회에서 제안되고 있는 단통법 개정이 어떠한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봄.
- 4) 단통법 시행후 가계통신비 영향, 서비스 개선 여부, 차별해소 여부 등을 포함한 소비자 인식조사 실시
 -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소비자 관점에서 권익을 제고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의 합리적인 단통법 개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1) 연구용역의 취지나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연구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기재

3) 연구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거나 목차 등을 기재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에 대한 소비자관점에서의 분석

2016년 11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National Council of the Green Consumers Network in Korea

I. 목적	
II. 사업내용	
제 1절. 현재 단통법을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견해와 문제점	6
제 2절. 20대 국회 발의된 단통법 개정안 내용 비교 분석	32
제 3절. 단통법 시행 후 가계통신비 영향 등을 포함한 소비자 인식조사	44
III. 결론	
제 1절. 결과요약	55
제 2절. 제언	57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개인인 경우)

계약자	발주처	서 청 원 의원실
	계약 상대자	· 성명 : 강남기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소속 및 직위 : 한국기업법무협회 사무국장 · 직장 및 자택전화번호 : - 직장 : - 자택 : · H·P번호 : · 통장계좌번호 : · 예금주명 : · 은행명 :
계약내용	용역명	TPP 추진 동향과 우리 기업 지원 방안
	계약 금액	일금 오백만원(₩5,000,000원)
	계약 기간	2016. 07. 01. ~ 2016. 08. 31.
	기타 사항	◆첨부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개인통장사본 1부, <u>여론조사개요 or 연구용역보고서 1부,</u> <u>용역결과물 1부(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u> <u>번역 결과물 각 1부)</u> ◆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 (가타소득세: 사례금의 4% 지방소득세: 가타소득세의 10% 원천징수 후 입금)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09. 5.

9-4

국회의원 서 청 원

신규하



연구용역보고서

1. 목 적

- 본 연구는 최근 세계 통상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상을 살펴보고, 특히 양자간 FTA에서 다자간 FTA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주목함
- 다양한 다자간 MEGA FTA 중에서도 가장 최근 타결되어 주목받고 있는 TPP의 추진 동향을 살펴보고, TPP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기업의 대처 전략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2. 계약 내용

- 계약기간 : 2016. 07. 01. ~ 2016. 8. 31.
- 연 구 자 : 강남기 박사(한국기업법무협회 사무국장)

3. 주요 내용

o 국내 FTA 추진 동향

- 우리 정부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국가 및 거대경제권과 FTA를 추진하고 있음
- 2004년부터 적극적으로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을 실시한 결과, 2016년 현재 52개국과의 FTA가 발효됨. 특히, 한중 FTA를 체결함으로써 미국, 중국, EU, ASEAN 등 거대 경제권역에 속하는 주요 국가와의 FTA를 사

실상 완결하였음

○ 세계 MEGA FTA 추진 동향

- 최근 자유무역협정의 동향은 소수 국가들이 참여하는 양자간 FTA가 아니라 지역간, 대륙간 통합 형태의 MEGA FTA의 체결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전세계 경제규모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MEGA FTA가 꾸준히 논의·진행되고 있음
- 아태지역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FTA,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등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원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MEGA FTA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 TPP 주요 내용

- TPP는 관세철폐 이외에도 거의 모든 사항에 있어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무역자유화를 지향하고 있음. 관세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노동, 환경, 정부조달, 기술무역장벽 등 FTA 주요 항목이 대부분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예외를 두지 않음
- TPP 협정문은 총 30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미 FTA를 기본으로 협상이 이루어진 바 전반적으로 한미 FTA 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주요 TPP 참여국 동향

- TPP 서명 이후 참여국의 국내 비준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각국 사정 ○에 따라 비준절차에 난항이 예상됨
- 특히, TPP 주요 참여국인 미국의 경우 2016년 11월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거 이후로 비준 시기가 늦춰질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경우 11월 총선 후 다음 국회 개원 전에 열리는 마지막 회기인 '레임덕 세션'에 TPP 비준을 강하게 밀어붙일 계획이지만, 양당의 대선

후보 모두 TPP 비준 관련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음

○ TPP의 우리 산업에의 영향

- TPP의 주요 내용 중 완전누적 원산지 기준의 일괄적용에 의해 미참여국의 상품은 가격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부품·소재가 TPP 참여국의 부품·소재로 대체될 수 있어 관련 산업의 타격이 예상됨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거시경제효과 분석에 의하면, TPP 참여시 2.5~2.6%의 실질 GDP 증가 효과가 발생. 불참시 0.11~0.19%의 GDP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

○ 우리 기업의 전략

- 우리가 TPP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TPP가 비준 절차를 마쳐 발효될 경우, 일본과 베트남, 멕시코 등 TPP 회원국에게 미국 시장을 잠식당할 우려가 매우 크므로, 주요 경쟁 산업별로 TPP 효과를 분석하여 영향이 큰 산업의 경우 별도의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 생산원가가 국내보다 낮은 TPP 역내 국가와 투자, 진출 등 협력 강화를 통해 역내 글로벌 생산·공급 네트워크(Global Value Chain; GVC)에 참여하여야 함

- TPP 미참여시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므로, 미래형 혁신 산업으로의 전환 등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TPP 참여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각 협정별 상이한 조건과 내용으로 인해 야기되는 혼란과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하나의 통합된 고도의 자유무역협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도 TPP가 필요

TPP 추진 동향과 우리 기업 지원방안

서청원 의원실

제 출 문

서청원 국회의원 귀하

본 보고서를 『TPP 추진 동향과 우리 기업 지원방안』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 8.

연구자 : 강 남 기

11-22

(계약상대자가 개인인 경우)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금 신청합니다.

국회의원 서청원



신정리

연구용역보고서

1. 목 적

- 본 연구는 법제교류의 중요성과 ODA 기반을 통한 사업 추진이 가능함에도 그동안 우리나라 법제교류 사업은 주로 일회적이고 체계가 부족한 형태로 추진된 측면이 있어 이에 최근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 경제통합 논의 속에서 중요한 공동체 기반이 될 법제도적 기반구축 작업의 일환으로 법제교류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이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적개발원조와 연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2. 계약 내용

- 계약기간 : 2016. 08. 01. ~ 2016. 10. 31.
- 연 구 자 : 김민식 교수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3. 주요 내용

○ 법제 교류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

- 법제교류와 관련해서는 유사한 의미를 가지면서도 다소 다른 방향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 법제교류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는 미국에서 공적개발원조와 관련되어 주장된 근대화론으로부터 발전한 '법발전론'이나 '법과 개발 운동(movement)', '새로운 법과 개발 운동(new law and development movement)' 등이 있음

○ 법제 교류의 필요성

- 법제교류를 통한 법적안정성 확보는 투자유치 촉진 및 경제성장의 촉진
제가 될 수 있음

- 중국 및 일본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
을 제고할 수 있음

○ 법제교류의 연혁

- 우리나라는 주로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과 미국 등 영미법을 도입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특히 일본 법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음

- 최초의 법제교류사업은 1997년 법무부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재
정 지원을 받아 개발도상국의 검사와 판사 등 법률전문가를 대상으로 '범
죄방지 및 형사사법국제연수과정(International Workshop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을 개설한 것

○ 법제교류 관련 추진사업

- 1997년에 법제교류사업이 시작된 이래 정부부처, 공공기관, 민간기관에
서 법제교류사업의 명목으로 다양한 장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대법원의 '외국 고위법관 한국사법제도 연수', 법무부의 '고위급 단기 연
수', 공정거래위원회의 '아시아 개도국 경쟁당국 공무원 대상 경쟁법 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존재

○ 법제교류의 문제점

- 우리나라 법제교류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법제교류에 대한 명확한 목
적 의식이 없다는 점과 이로 인해 구체적인 추진체계와 방법론이 정립되
지 못하고 있다는 점임

- 현재 다양한 부처나 공공기관에서 꾸준히 법제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
지만,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임

○ 한국형 법제교류 ODA 실현방안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법제교류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이를 총괄하는 독립적 기구의 설치가 필요함

- 가칭 '국가법제교류위원회'를 설치하여 법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가전략 수립, 관련 정책의 심의·조정·점검 등 법제교류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 법제교류 관민협력 체계 구축

- 한국형 법제교류 ODA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ODA 자금을 통해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으므로, 그 중 일정 비율은 민간차원의 보조금으로 활용하여 민간부문의 법제교류 영역도 함께 성장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맞춤형 법제교류 전략 수립

- 맞춤형 법제교류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원국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가 선행되고 이에 맞는 기본계획 초안의 수립 후 이를 수원국의 담당기관과 협의하여 조율할 필요가 있음

최종보고서

한국형 법제교류 ODA 실현방안 연구

~~11-62~~
11-62

[별지 12]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개인인 경우)

계약자	발주처	서청원 의원실	
	계약상대자	· 성명 : 윤영민 · 주소 : · 주민등록번호 : · 소속 및 직위 : 빌드원주식회사/과장 · 직장 및 자택전화번호 : - 직장 : · H·P번호 : · 통장계좌번호 : · 예금주명 : · 은행명 :	
계약내용	용역명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계약금액	일금 오백만원(₩5,000,000원)	
	계약기간	2016. 09. 01. ~ 2016. 11. 25.	
	기타사항	◆첨부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개인통장사본 1부, <u>여론조사개요 or 연구용역보고서 1부,</u> <u>용역결과물 1부(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 번역 결과물 각 1부)</u> ◆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 (기타소득세: 사례금의 4% 지방소득세: 기타소득세의 10% 원천징수 후 입금)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11. 25.

국회의원 서 청 원



작성자: 이준규

연구용역보고서

1. 목 적

인사청문회 제도는 헌법상의 권력분립, 법치주의,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 등 공직 적합성을 국회에서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고위공직에 적합한 인사가 임명되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인사청문제도는 짧은 인사청문기간과 부실한 자료제출, 편중된 검증과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 부재, 정략적, 정파적 질의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즉, 도덕성 검증에 치우쳐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 등 전반적인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인격 및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의 문제점까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용역은 인사청문회의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 도덕성 검증과 직무능력 검증의 이원화 등 인사검증시스템의 개편, 인사청문 기간의 확대, 거짓 진술에 대한 처벌 강화, 정략적, 정파적 청문회 운영의 개선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2. 계약 내용

- 계약기간 : 2016. 09. 01. ~ 2016. 11. 25.
- 연 구 자 : 윤영민

3. 주요 내용

I. 인사청문회의 의의와 기능

- 1) 인사청문회의 의의
- 2) 인사청문회의 기능
- 3) 인사청문회의 검증 대상
- 4) 인사청문회의 실익과 한계
- 5) 해외 인사청문제도

II. 인사청문회의 제도적 문제점

- 1). 인사청문회 운영의 문제점
- 2)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점

III. 인사청문회의 제도적 개선 방향

- 1) 인사검증 시스템의 개발
- 2) 검증절차의 이원화
- 3) 허위진술 및 불출석에 대한 처벌 강화
- 4) 청문회 기간 연장

정책연구용역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윤 영 민

[별지 12]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개인인 경우)

계약자	발주처	서청원 의원실
	계약상대자	· 성명 : 김정태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소속 및 직위 : 공주대학교 교수 · 직장 및 자택전화번호 : - 직장 : · H·P번호 : · 통장계좌번호 : · 예금주명 : · 은행명 :
계약내용	용역명	전국어촌의 유형구분과 개발전략
	계약금액	일금 사백삼십육만원(₩4,360,000원)
	계약기간	2016. 10. 01. ~ 2016. 12. 10.
	기타사항	◆첨부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개인통장사본 1부, <u>여론조사개요 or 연구용역보고서 1부,</u> <u>용역결과물 1부</u> (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 번역 결과물 각 1부) ◆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 (기타소득세: 사례금의 4% 지방소득세: 기타소득세의 10% 원천징수 후 입금)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12. 13.

국회의원 서 청 원

작성자: 이준규 



연구용역보고서

1. 목 적

본 연구는 체계적인 어촌개발 정책 추진을 위해서 어가가 단 1곳이라도 있는 전국의 82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어촌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개발전략을 수립하였다. 종합적 수준에서 어촌지역과 읍·면·동 규모의 사업추진이 가능한 곳, 2~3개 마을단위 권역사업이 가능한 지역 및 주산업 등 지역상황을 반영하여 사업내용의 다양성을 지원하면서 지역 내 개발여건과 조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행정구역에 기초한 어촌지역의 유형구분과 지역개발방향'의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전국 어촌지역의 유형과 개발방향에 거시적 접근을 서술하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화성시 지역의 어촌개발방향을 제시한다.

2. 계약 내용

- 계약기간 : 2016.10.01.~2016.12.10
- 연 구 자 : 김정태, 공주대학교 교수

3. 주요 내용

- 1) 정책대상으로서 어촌의 공간적 검토
- 2) 어촌지역 유형화 관련 검토
- 3) 어촌의 유형별 분류
- 4) 화성시 어촌유형별 개발방향
- 5) 전국 어촌지역의 유형별 세력순위

정책연구용역

전국어촌의 유형구분과 개발전략

김 정 태

[별지 11]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사업자인 경우)

계약자	발주처	서청원 의원실	
	계약상대자	· 사업자등록번호 : 649-81-00691 · 상호 : (주)케이리서치 앤컨설팅 · 법인등록번호 or 대표자주민번호: 110111-6326270 · 대표자 : 강남기 · 사업장전화번호 : · 주소 : · H·P번호 : · 사업자통장계좌번호 : · 예금주명 : · 은행명 :	
계약내용	용역명	신기후체제에 따른 한·중 협력 방안 연구	
	계약금액	일금 오백만원(₩5,000,000원)	
	계약기간	2017. 2. 1. ~ 2017. 3. 20.	
	기타사항	◆첨부서류 : 전자세금계산서(과세사업자일 경우) 또는 계산서(면세사업자일 경우) 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사업자통장사본 1부 여론조사개요 or 연구용역보고서 1부, 용역결과물 1부(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 번역 결과물 각 1부) ◆전자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 항목의 기재사항 (등록번호:116-83-00045, 법인명:국회사무처, 성명:우윤근, 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업태:부동산, 종목:임대) ◆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7. 3. 23.

국회의원 서 청 원



유병욱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		20170323-10000000-57127025			
공급자	등록번호	649-81-00691		종사업장번호		등록번호	116-83-00045 종사업장번호			
	상호(법인명)	주식회사 케이리서치앤 컨설팅		성명	강남기	상호(법인명)	국회사무처 성명 우윤근			
	사업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2, 202호(여의도동, 대산빌딩)				사업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업태	서비스	종목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업태	부동산	종목 임대		
	이메일	narae900@naver.com				이메일	alvaraltto@gmail.com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수정사유				
2017/03/23		4,545,454		454,546						
비고										
월	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03	23	국제기후변화에 따른 한중 협력방안 연구				1		4,545,454	454,546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이 금액을 (청구) 함			
5,000,000										


 본 인쇄물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또는 전송 입력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발급사실 확인은 상기 홈페이지의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제3자 발급사실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649-81-00691

법인명(단체명) : 주식회사 케이리서치앤컨설팅

대표자 : 강남기

개업연월일 : 2017년 03월 02일 법인등록번호 : 110111-6326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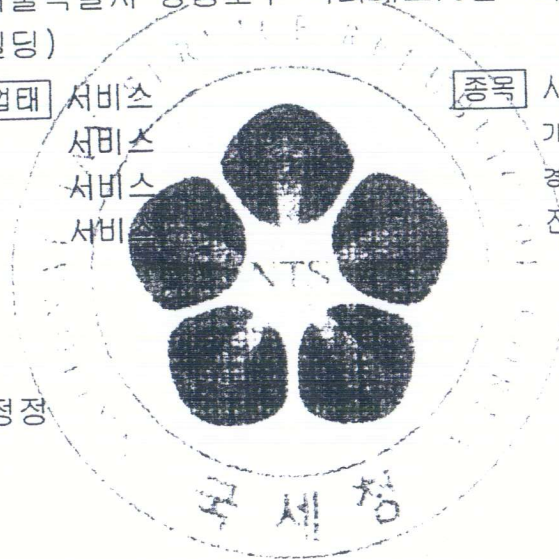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2, 202호(여의도동, 대산빌딩)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2, 202호(여의도동, 대산빌딩)

사업의종류 : ☒업태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종목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경영컨설팅업, 공공관계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발급사유 : 정정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 여()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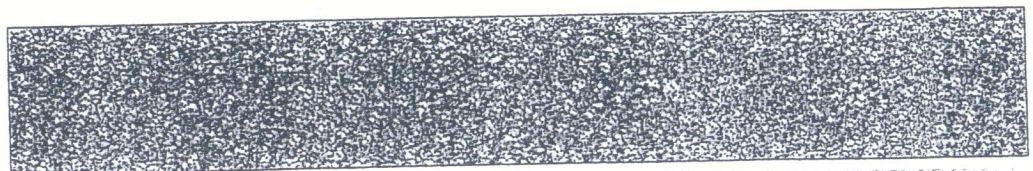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전자우편주소 :

2017년 03월 07일

영등포세무서장



국세청



국제기후변화에 따른 한·중 협력방안 연구

1. 목 적

- 본 연구에서는 2015년 파리협정 채택을 통해 출범한 신기후체제 출범을 맞아, 환경문제가 개별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하에,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한 중국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계약 내역

- 계약기간 : 2017. 02. 1. ~ 2017. 03. 20.
- 연구기관 : ㈜케이리서치앤컨설팅

3. 주요 내용

○ 연구의 필요성

- 환경문제는 초국가적 이슈로서 다자적 차원의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인접국으로서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국과의 해결방안 모색은 그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 ‘세계의 공장’역할을 하며 급속한 산업화를 추진해온 중국은, 이러한 고속성장과 함께 심각한 환경오염과 천연자원의 비합리적인 개발로 환경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인접국인 우리나라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임

○ 중국의 환경문제

- 중국은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과 도시고형폐기물의 세

계 1위 배출국임

- 최근 몇 년간 중국정부의 대기오염 방지 노력으로 오염물질 배출규모가 다소 감소하기는 했으나, 대기환경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
- 폐기물 처리분야는 중국의 환경보호산업 중 대기 및 수처리 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그 심각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급격한 공업화, 인구증가, 도시화로 인해 대다수 도시에서 각종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처리할 매립 및 소각 시설 등이 빠르게 포화되고 있음
- 중국은 공급용수 부족과 수질 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음. 전국 660여개 도시 중 300여개 도시에서 수자원부족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구 100만 명 이상인 30개 도시는 고질적인 물부족 문제가 발생함

○ 중국의 환경법제

- 환경보호와 관련된 중국의 법체계는 환경보호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대기오염방지법, 수질오염방지법, 고형폐기물 오염방지법, 환경소음방지법 등 오염분야별 법률과 국무원이 제정·시행하는 환경보호 관련 행정법규(조례, 지도규정 등), 환경보호부 등 각 부서에서 제정하는 부문규장(관리방법, 의견 등) 등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한국·중국 환경 협력 방안

- 정부간 협력체뿐만 아니라, 민간 협력체 구축 및 환경 분야의 정책 및 프로젝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장기 정책연구 사업들을 개발하는 등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
- 양국이 정부 및 연구기관의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환경보호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환경오염에 공동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 특히, 실질적 환경 협력을 위해서 장기적인 전략과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자금투자 및 인력교류, 대형 환경프로젝트 지원 등을 통해 R&D 이루어져야 함

최종보고서

신기후체제에 따른 한·중 협력 방안 연구

[별지12]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개인인 경우)

계약자	발주처	서 형 수 의원실
	계약상대자	· 성명 : 변재  · 주소 : · 주민등록번호 : · 소속 및 직위 :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 · 직장 및 자택전화번호 : - 직장 : - 자택 : · H·P번호 : · 통장계좌번호 : · 예금주명 : · 은행명 :
계약내용	용역명	미래세대 사회보장정책 연구
	계약금액	일금 오백만원(₩5,000,000원)
	계약기간	2016. 9. 01. ~ 2016. 12. 15.
	기타사항	◆첨부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개인 통장사본 1부, <u>여론조사개요 or 연구용역보고서 1부,</u> <u>용역결과물 1부(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 번역 결과물 각 1부)</u> ◆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 (가타소득세: 사례금의 4% 지방소득세: 가타소득세의 10% 원천징수 후 입금)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12. 14.

국회의원 서 형 수



[작성자 윤호숙 (서형수)]

생산적 사회보장지출 및 소비적 사회보장지출의 적정선 도출

1. 연구의 필요성

- 사회의 변화와 함께 우리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요인들의 변화가 예상됨
 - 이들 중에는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다수 포함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함
 - 이에 이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의 고찰과 더불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예측을 수행함으로써 미래 사회위험을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생산적 사회보장 지출과 소비적 사회보장 지출의 적정선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함
 - 생산적 사회보장 지출: 출산, 아동, 보육 등 미래세대를 위한 지출 및 사회서비스, 고용정책 등 사회복지 지출 감소를 위한 생산적 투자
 - 소비적 사회보장 지출: 소득보장 등 급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지출
- 생산적 사회보장 지출과 소비적 사회보장지출의 적정 수준의 도출방안
 - ① 현재 생산적 사회보장 지출 및 소비적 사회보장 지출의 적정성 여부 판단
 - ② 각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사회, 경제, 문화, 인구적 특수성의 영향을 고려하여 국제 비교
 - ③ 현재의 정책기조가 다양한 대안적 방향을 가질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미래의 적정 수준을 예측

2. 분석을 위한 모형의 설정

가. 현재 수준의 적정성 여부 분석

- OECD 국가들에 대한 회귀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지출수준을 결정하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에 대해 통제를 실시한 후 그 추정치를 산출하여 분석

□ 변수 및 모형의 구성

- 종속변수: 생산적 사회보장 지출/총 사회보장지출, 소비적 사회보장 지출/총 사회보장지출, 생산적 사회보장 지출/GDP, 소비적 사회보장 지출/GDP, 생산적 사회보장 지출/소비적 사회보장 지출

$$Y_{it} = \eta_i + \tau T + \sum_m \beta_m R_{mi} + \sum_n \delta_n Z_{nit-1} + \varepsilon_{it} \quad (1)$$

Y_{it} = i 국가의 t 년도의 지출비중

T = 시간의 선형효과를 통제하는 변수

R_i = 복지국가의 유형(regime)의 효과를 통제하는 변수들

Z_{it} = i 국가의 t 년도의 통제변수들의 값

η_i = 국가 i 에 고유한 효과

나. 정책기조에 따른 적정 지출수준 분석

□ 국가의 정책기조에 따라 그 사회의 복지지출 적정규모는 변화함

-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복지국가의 정책기조를 자유주의/사민주의/보수주의 등의 기조 중 어떤 것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벤치마킹의 기준이 되는 적정 재정지출 수준의 차이가 발생함
- 따라서 이들 정책기조에 따른 적정 지출수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가 각각의 기조들을 선택할 경우 지출해야 할 적정 지출의 규모를 도출해 보고자 함

□ 정책기조에 따른 적정 지출수준 추정을 위한 모형의 구성

- 적정 지출수준을 추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모형을 구성함

$$Y_t^{Km} = \alpha + \eta^K + \tau t + \hat{\beta}_m + \sum_n \hat{\delta}_n Z_{mt-1}^K \quad (2)$$

Y_t^{Km} = 우리나라가 만약 m 유형의 복지국가라면 t 연도에 지출하여야 할 적정 지출 수준
(m = 자유주의, 사민주의, 보수주의)

η^K = 시간에 대하여 변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특성
(country-specific effect)

β_m = m 유형의 복지국가에 고유한 특성 (regime-specific effect)

Z_{t-1}^K = $t-1$ 연도의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특성

- 위의 식 (2)는 앞에서 추정한 식 (1)에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특성, 우리나라에 고유한 시간 불변적 특성, 그리고 연도별 고유특성을 대입한 후 자유주의, 사민주의, 보수주의 등 3가지 복지국가 유형에 고유한 특성을 각각 대입
- '만약 우리나라가 각각의 복지국가 정책기조를 채택한다면 지출하여야 할 적정 지출의 규모'를 도출

다. 적정 지출수준 전망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적정 재정지출 규모 산출을 위한 모형의 구성

- 식 (1)에 포함된 외생변수들의 장래 수치에 대해 일정한 가정을 전제한 후, 이러한 가정 하에 도출된 외생변수의 값들을 모형에 대입, 적정 재정지출 규모 전망
- 이를 위해 기존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전망치를 활용, 외생변수의 값을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음

□ 적정 지출수준의 전망을 위한 추정모형의 구성

$$\hat{Y}_{t+j}^{Km} = \alpha + \eta^K + \tau(t+j) + \hat{\beta}_m + \sum_n \hat{\delta}_n \hat{Z}_{t+j-1}^K \quad (3)$$

$\hat{Y}_{t+j}^{Km}$ = 우리나라가 만약 m 유형의 복지국가라면 j 연도 후에 지출하여야 할 적정 고령화 재정지출 수준의 전망치
(m = 자유주의, 사민주의, 보수주의)

$\hat{Z}_{t+j-1}^K$ = $j-1$ 연도 후의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특성의 전망치

- 위의 식(3)에서와 같이 미래의 고령화 관련 재정지출의 적정수준은 미래의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특정된 가정 하에 전망한 후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만약 우리나라가 특정 복지레짐의 정책기조를 지향한다면 지출하여야 할 재정지출의 수준을 나타냄

3. 분석에 활용될 변수 및 활용자료

가. 분석에 활용되는 변수의 구성

□ 위의 모형을 분석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변수들이 활용될 수 있음

- 특히 첫 번째 모형의 경우 예산지출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제하는 작업이 중요한 바, 다음과 같은 변수들을 통제변수들로 활용하고자 함

① 통제변수의 정의

변수의 정의
교역량: export + import as % of GDP
인구(명)
GDP: 실질 1인당 GDP(\$ current)
GDP의 소비지출분(%)
GDP의 정부지출분(%)
GDP의 투자지출분(%)
저축(%)
국내생산물 물가수준(USA=100)
고령화 인구비(65세 이상 인구비, %)
실업률(%)
환율(US=1)
여성 잠재수명손실(# of years)
남성 잠재수명손실(# of years)
서비스 산업 고용비율(%)
노조 가입율(%)
복지레짐: 자유주의/사회민주주의/보수주의/동아시아 복지국가

② 우리나라 사회 경제적 특성 전망치

- 적정 사회보장지출수준의 추계에 활용되는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특성 관련 변수는 기존 연구의 추정치를 활용하거나 혹은 과거 데이터의 추세를 연장하여 예측치를 구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 특히 인구, GDP 변수는 이들 값들이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추세를 연장한 예측치를 활용할 수 없음
- 따라서 미래의 인구, 고령인구 비율, 국내총생산(GDP)의 경우 기존 연구들에서 밝힌 추정치의 값을 분석에 활용하고자 함

③ 종속변수: 복지지출 규모

- 본 연구에서는 생산적 사회보장지출 및 소비적 사회보장지출의 적정선을 도출하기 위해 「① 생산적 사회보장지출/총 사회보장지출 ② 소비적 사회보장지출/총 사회보장지출 ③ 생산적 사회보장지출/GDP ④ 소비적 사회보장지출/GDP ⑤ 생산적 사회보장지출/소비적 사회보장지출」로 종속변수를 구성함

나. 분석에 활용되는 자료

① Penn World Table 9.0:

- Penn World Table은 각 국가들의 소득, 생산성 등 다양한 거시경제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9.0 버전에서는 182개국의 1950년부터 2014년까지 자료를 포함하고 있음
- 본 모형의 분석에서는 GDP, 교역량 등 거시경제변수의 자료로 활용됨

②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2016)

-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는 1960년 이후의 실업률, 실업기간, 노조가입률, 최저임금 등 각국의 노동시장 관련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음
- 본 모형의 분석에는 인구수, 실업률 등 노동시장 및 인구관련 변수들의 자료로 활용됨

③ OECD Health Statistics(2016)

- Health Statistics 자료는 OECD 국가의 기대수명, 의료 관련 자원의 보유현황, 의료비 지출수준 등 건강과 관련한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음
- 본 모형의 분석에는 잠재수명손실 변수의 자료로 활용됨

④ OECD Factbook Statistics(2016)

- OECD Factbook은 OECD 국가들 및 중국, 인도 등의 국가에 대한 인구, 사회, 경제 및 환경 등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음
- 본 모형의 분석에서는 저축률 변수의 자료로 활용됨

⑤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2016)

- OECD SOCX 자료는 사회복지관련 지출의 수준, 각 프로그램별 사회보장지출 정도와 관련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음

－ 본 모형의 분석에서는 종속변수인 사회보장지출 변수의 자료로 활용됨

⑥ 국내 전망 추정치 관련 연구자료

- － 국내 인구추계 및 고령인구 비율 추계: 「장기적 관점의 사회보장정책 개편 방향 마련」의 연구에 제시된 인구구조의 추계치를 활용함
- － GDP 성장률: 국회 예산정책처(2012)의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에 제시된 GDP 예측치를 활용함

〈표〉 분석에 활용되는 변수 및 변수의 자료 출처 요약

변수	자료출처
1인당 GDP	Penn World Table 9.0
대외 교역량	
물가수준	
환율	
GDP의 소비지출부분	
GDP의 정부지출부분	
GDP의 투자지출부분	
인구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서비스 산업의 비율	
고령화 인구비	
실업률	
노조가입율	
여성 잠재수명손실	OECD Health Statistics
남성 잠재수명손실	
저축률	OECD factbook
우리나라 인구 추정치	「장기적 관점의 사회보장정책 개편방향 마련」 연구의 추정치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 추정치	
우리나라 GDP 추정치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분석」 연구의 추정치
사회보장지출비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4. 논의사항

□ 모형의 구성 등의 의견

□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였으나 누락된 변수가 존재하였는지, 누락된 변수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의견 제시

미래세대 사회경제정책 연구

2016. 12.

국회의원 서형수

85

10-4

[별지12]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개인인 경우)

계약자	발주처	설 훈 의원실
	계약 상대자	· 주민등록번호 : _____ · 성명 : 임을출 · 소속 및 직위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 · 직장 및 자택전화번호 : - 직장 : 02-3700-0791 - 자택 : _____ · H·P번호 : _____ · 통장계좌번호 : _____ · 예금주명 : 임을출 · 은행명 : 하나은행
계약내용	용역명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계약 금액	일금 삼백만원(₩3,000,000원)
	계약 기간	2016. 8. 24. ~ 2016. 9. 23.
	기타 사항	◆첨부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개인 통장사본 1부, <u>여론조사개요 or 연구용역보고서 1부,</u> <u>용역결과물 1부(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 번역 결과물 각 1부)</u> ◆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 (가타소득세: 사례금의 4%, 지방소득세: 가타소득세의 10% 원천징수 후 입금)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10. 4.

국회의원 설 훈 (인)

[작성자 박 미 경 (서명)]



연구용역보고서

1. 목 적¹⁾

○ 본 연구에서는 우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의 열쇠(key)를 쥐고 있는 중국과의 공식 교역과 비공식 경제협력의 실태 분석 등을 통해 제재의 효과를 평가.

- 이어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 당국의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당 대회에서 제시된 향후 경제정책 수립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 및 평가

2. 계약 내용

- 계약기간 : 2016.8.24. - 9.23.(30일간)

- 연 구 자²⁾ : 임을출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개발국제협력센터 센터장 겸임)

3. 주요 내용³⁾

I. 머리말

II. 대북제재조치 이행실태와 북중교역·경협에 미친 영향

1. 대북제재 조치와 이행 실태 평가

2. 제재가 북중 교역 및 경협에 미친 영향

가. 공식 교역 측면

나. 현장 관찰

1) 연구용역의 취지나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연구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기재

3) 연구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거나 목차 등을 기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임을출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별지11]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사업자인 경우)

계약자	발주처	설 훈 의원실
	계약상대자	· 사업자등록번호 : 206-82-63822 · 상호 : 대학교육연구소 · 대표자주민번호 : _____ · 대표자 : 박거용 · 사업장전화번호 : _____ · 주소 : · H·P번호 : _____ · 사업자통장계좌번호 : _____ · 예금주명 : _____ · 은행명 : _____
계약내용	용역명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
	계약금액	일금 오백만원(₩5,000,000원)
	계약기간	2016.11.21. ~ 2016.12.16.
	기타사항	◆첨부서류 : 전자세금계산서(과세사업자일 경우) 또는 계산서(면세사업자일 경우) 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사업자통장사본 1부 <u>여론조사개요 or 연구용역보고서 1부,</u> <u>용역결과물 1부</u> (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 번역 결과물 각 1부) ◆전자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 항목의 기재사항 (등록번호:116-83-00045, 법인명:국회사무처, 성명:박형준, 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업태:부동산, 종목:임대) ◆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12. 20.

국회의원 설 훈



[작성자 박 미 경 (박형준)]

연구용역보고서

1. 목 적¹⁾

□ 1995년 5월 발표한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5.31 교육개혁안)’ 에서 고등교육의 주요 과제로 ‘고등교육의 세계화, 국제화’가 제시 됨. 이후 고등교육 국제화 관련 정책들이 다양하게 수립·시행 됨

□ 참여정부 때 까지는 외국교육기관유치, FTA 등 교육개방을 중심으로 국제화 정책이 추진되었다면, 이명박정부 부터는 정부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orld Class University : WCU)’, 포물러 지표에 글로벌(교육역량강화사업) 지표 포함, 해외 취업 연수 정책인 WEST 등이 확대 추진 됨

□ 박근혜 정부도 2013년 8월 발표 한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에서 정책 추진 배경의 일환으로 “국제화로 인한 파트너십 확대와 경쟁의 심화”를 제기하고, 이어 △스터디 코리아 2020프로젝트(2015년 7월)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국내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 허용 및 국내 대학 학위 수여를 위한 외국대학 이수학점의 인정범위 확대(2016년 2월) 등을 발표함

□ 하지만 △양적 팽창 위주의 정책 △정부 투자 부족으로 인한 대학의 교육여건 부실 △해외 학위에 대한 과도한 우대 정책 등으로 인해 고등교육의 국제화는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 국제화 관련 주요 정책과

1) 연구용역의 취지나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현황을 검토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2. 계약 내용

- 계약기간 :
- 연 구 자²⁾ : 대학교육연구소

3. 주요 내용³⁾

I. 서문

II.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추진 과정

1. 김영삼 정부 이전
2. 김영삼 정부(1993~1997년)
3. 김대중정부(1998~2002년)
4. 노무현정부(2003~2007년)
5. 이명박정부(2008~2012년)
6. 박근혜정부(2013년~현재)

III. 국제화 관련 주요 정책 진단

1. 외국인 유학생 유치
2. 학점 및 교육과정 교류

2) 연구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기재

3) 연구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거나 목차 등을 기재

- 1) 학점 인정
- 2) 교육과정 공동운영
3. 외국 교육기관 유치
4.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
5. 해외 취업
6. 외국인 교수 채용

IV.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의 문제점

1. 경제논리에 종속된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2. 양적 팽창 위주의 정책 한계
3. 대학 구조조정 대안으로 ‘선심성’ 정책 추진
4. 규제 완화와 질 관리 방안 부실로 인한 피해
5. 일부 국가 중심의 편중 심화

V. 개선 방안

1.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기조 전환
2. 양적 팽창 위주의 국제화 정책 재고
3. 규제 완화 재검토 및 정부 관리·감독 강화
4. 국제화 비용 학생 전가 방지

고 유 번 호 증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본점)

고유번호 : 206-82-63822

단 체 명 : 대학교육연구소

대 표 자 성 명 : 박거용

생 년 월 일 : 1953 년 11 월 01 일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91(성수동2가, 현진빌딩 7층)

발 급 사 유 : 정정

(유의사항)

- (1) 이 고유번호증의 부여로 인해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 (2)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6 년 04 월 12 일

성 동 세 무 서 장



청 색

[별지 제28호 서식(1)]

계 산 서 (공급받는자)										책 번 호		권		호		
										일련번호						
공 급 자	등록번호	206 - 82 - 63822								등록번호	116 - 83 - 00045					
	상 호 (법인명)	대학교육연구소			성명	박거용			상 호 (법인명)	국회사무처			성명	우윤근 (인)		
	사 업 장 소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91								사 업 장 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업 태	서비스			종목	연구 및 개발업			업 태	부동산			종목	임대		
작 성		공 급 가 액										비 고				
년	월	일	공	관	수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2016	12	19							5	0	0	0	0	0	0	
월	일	품 목		규 격	수 량	단 가		공 급 가 액		비 고						
12	19	연구용역비						5,000,000								
합 계 금 액		현 금		수 표		어 음		외상미수금		이 금액을 영수 함.						
										(인)						

2207-325A 95. 1. 25 승인

182mm×128mm 인쇄용지(특급)34g/m²

성훈(인) 홍영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진단 및 개선 방안

2016.12.

대학교육연구소

[별지11]

130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사업자인 경우)

계약자	발주처	설훈 의원실	
	계약 상대자	· 상호 : (주)에드잇 · 대표자 : 배지은 · 주소 : /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61623 · 법인등록번호 : 110111-4379750 · 사업자전화번호 : / · H·P번호 : · 사업자통장계좌번호 : · 예금주명 : · 은행명 : /	
계약내용	용역명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촛불집회 온라인 양태조사를 통한 민심 변화 추이 분석	
	계약 금액	일금 오백만원(₩5,000,000원)	
	계약 기간	2016. 11. 21. ~ 2016. 12. 19.	
	기타 사항	◆첨부서류 : 전자세금계산서(과세사업자일 경우) 또는 계산서(면세사업자일 경우) 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사업자통장사본 1부 <u>여론조사개요 or 연구용역보고서 1부,</u> <u>용역결과물 1부(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 번역 결과물 각 1부)</u> ◆전자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 항목의 기재사항 (등록번호:116-83-00045, 법인명:국회사무처, 성명:박형준, 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업태:부동산, 종목:임대) ◆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12. 21.

국회의원 설 훈



[작성자 박 미 경 (서명) 170]

연구용역보고서

1. 목 적

- 촛불집회를 메인 키워드로 차수별 분석을 통해 국민들의 소셜 담론을 살펴봄으로써 민심의 추이 및 주요 키워드를 분석, 향후 대책에 활용하고자 함

2. 계약 내용

- 계약기간 : 2016.11.21. ~ 2016.12.19
- 연 구 자 : 배지은 / (주)에드잇 대표이사

3. 주요 내용

제 1장 개요

제 2장 차수별 촛불집회 빅데이터 추이분석

제 3장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주요 인물 빅데이터 감성 분석

- 1) 박근혜 대통령 2) 최순실 게이트 관련 인물 3) 최순실 4) 황교안 5) 김기춘 6) 정운하 7) 고영태 8) 정유라 9) 우병우 10) 김종 11) 차은택

제 4장 주요 정치인물 빅데이터 감성 분석

- 1) 문재인 2) 반기문 3) 안철수 4) 이재명 5) 남경필

제 5장 주요 정치인물 빅데이터 감성 분석

- 1) 김기춘 2) 김무성 3) 박지원 4) 심상정 5) 우상호 6) 이정현 7) 정진석 8) 추미애

제 6장 주요 단체 빅데이터 감성 분석

- 1) 청와대 2) 새누리당 3) 더불어민주당 4) 국민의당 5) JTBC

사 업 자 등 록 증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214-88-61623

법인명(단체명) : 주식회사 애드잇

대표자 : 배지은

개업년월일 : 2010년 06월 25일 법인등록번호 : 110111-4379750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1길 18,3층 (역삼동,삼정빌딩)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1길 18,3층 (역삼동,삼정빌딩)

사업의종류 : ☒업태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종목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
마케팅 컨설팅
광고및홍보대행업

교부사유 : 소재지정정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 여() 부(☒)

전자세금계산서 전용메일주소 :

2013 년 09 월 05 일

역삼 세무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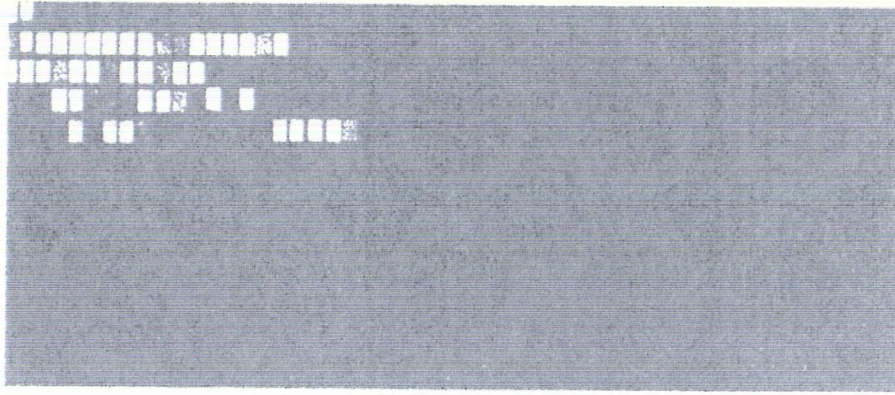
NTS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		20161220-10000000-93056141				
공급자	등록번호	214-88-61623		종사업장번호		수령인	등록번호	116-83-00045		종사업장번호	
	상호(법인명)	주식회사 애드잇		성명	배지은		상호(법인명)	국회사무처		성명	박형준
	사업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1길 18, 3층동(역삼동, 삼성빌딩)					사업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업태	서비스	종목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			업태	부동산	종목	임대	
	이메일	ceo@additcorp.com					이메일	kyeong5101@naver.com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수정사유				
2016/12/20		4,545,455			454,545						
비고											
월	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12	20	연구용역		1	4,545,455	4,545,455	454,545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이 금액을 (청구) 함					
5,000,000											



본 인쇄물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또는 전송 입력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발급사실 확인은 상기 홈페이지의 "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제3자 발급사실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촛불집회 온라인
양태조사를 통한 민심 변화 추이 분석



[별지12]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개인인 경우)

계약자	발주처	소병훈 의원실
	계약상대자	· 성명 : 김한창 · 주소 : · 주민등록번호 : · 소속 및 직위 : 공공정책연구원 원장 · 직장 및 자택전화번호 : - 직장 : - 자택 : · H·P번호 : · 통장계좌번호 : · 예금주명 : · 은행명 :
계약내용	용역명	19대 대통령 행정부 조직개편의 방향과 전망 : 헌법기준에 맞춘 정부해체를 통한 새로운 출발
	계약금액	일금 오백만원(₩5,000,000원)
	계약기간	2016. 11. 14. ~ 2016. 12. 14.
	기타사항	◆첨부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개인 통장사본 1부, 여론조사개요 or 연구용역보고서 1부, 용역결과물 1부(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 번역 결과물 각 1부) ◆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 (가타소득세: 사례금의 4% 지방소득세: 가타소득세의 10% 원천징수 후 입금)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접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12. 19.

국회의원 소 병 훈

[작성자 이 지 나]



연구용역보고서

1. 목 적¹⁾

최순실 사태와 관련하여 촛불시위의 국민의 열망을 확인하고 이러한 국민적 열망이 차기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어떻게 수용되어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차기정부가 국민의 뜻을 수용하고 실천하는 정부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이론적 체계와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한 주요 이슈들을 명확히 하기 위함임.

2. 계약 내용

- 계약기간 : 19대 대통령 행정부 조직개편의 방향과 전망:
헌법기준에 맞춘 정부해체를 통한 새로운 출발
- 연 구 자²⁾ : 김한창(공공정책연구원, 원장)

3. 주요 내용³⁾

I. 19대 대통령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

1. 최순실사태와 촛불혁명의 열망
2. 초유의 관료제위기와 트릴레마 극복

II. 19대 대통령 정부조직개편의 기준과 틀의 도출

1. 기존 정부조직개편의 이론
2. 역대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3. 박근혜 정부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반성
4. 정부조직개편의 틀의 도출: 촛불시위의 의미의 수용

1) 연구용역의 취지나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연구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기재

3) 연구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거나 목차 등을 기재

Ⅲ. 19대 대통령 정부조직개편 안

1. 정부조직개편의 주요이슈
2. 19대 대통령 정부의 캐리커처
3. 결어: 헌법수호적 정부조직 개편을 지향하며

※ 부록: 발제문 보도자료 초안 등

19대 대통령 행정부 조직개편의 방향과 전망

헌법기준에 맞춘 정부해체(Deconstruction Government)를 통한 새로운 출발

정부조직개편의 논리가 행정적 목적과 정치적 필요에 따라 이뤄지고 한편으로는 정치적 필요 때문에 정부조직개편의 목적과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학자들은 주장한다. 하지만 대표적인 대부처주의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위한 정부조직개편이지만 사실상 조직효과성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실증분석도 있다.

본 보고서는 정부조직개편은 철저한 정치적 목적을 분명히하고 그 정치적 목적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정치적 행위임이 분명할 때 민주주의와 헌법 등의 규범적 가치에 맞게 정부조직개편을 할 때 역설적이게도 정부조직개편의 목적과 달성이 안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특히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사태와 같은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결과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점에서 그 사태에 대한 치유책으로서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국민을 치유하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강력한 상징을 정부조직개편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도 차기정부는 국민과 함께 성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김 한 창

공공정책연구원

11-4

[별지12]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개인인 경우)

계약자	발주처	손혜원 의원실	
	계약상대자	· 주민등록번호 : · 성명 : 박근용 · 소속 및 직위 :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주소 : · 직장 및 자택전화번호 : - 직장 : · H·P번호 : · 통장계좌번호 : · 예금주명 : · 은행명 :	
계약내용	용역명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8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책 연구	
	계약금액	일금 이십만원(₩200,000원)	
	계약기간	2016. 9. 26. ~ 2016. 10. 14.	
	기타사항	◆첨부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개인 통장사본 1부, <u>여론조사개요 or 연구용역보고서 1부,</u> <u>용역결과물 1부</u>(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 번역 결과물 각 1부) ◆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 (가타소득세: 사례금의 4% 지방소득세: 가타소득세의 10% 원천징수 후 입금)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10. 25.

국회의원 손혜원

[작성자 이슬기 (서명)]



(Handwritten signature)

연구용역보고서

1. 목 적¹⁾

-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8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책을 도출하고자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함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혜원 의원실의 국정감사 정책보고서에 수록될 예정임

2. 계약 내용

- 계약기간 : 2016.9.26. ~ 2016.10.14
- 연 구 자²⁾ : 박근용(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3. 주요 내용³⁾

- 2009년 개원이래 2016년 최근까지의 로스쿨 제도 도입을 통해 얻고 있는 이점과 로스쿨 제도 도입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개선점에 대해 살펴봄
- 로스쿨 제도 도입 8년에서 주목할 점들로 ‘△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 시스템의 작동 △ 법률가 사회의 다양화와 균형 촉진 △ 교육을 통한 양성 시스템과 충돌하는 정원제 선발시험제 유지 △ 로스쿨 입학생 선발과 법관 및 검사 임용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의 유의점’을 살펴봄

1) 연구용역의 취지나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연구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기재

3) 연구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거나 목차 등을 기재

로스쿨 도입을 주장했던 사람이 돌아본 로스쿨 시대 8년¹⁾

박근용(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1. 들어가며

로스쿨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공론의 장에 오른 것은 1990년대 중반이었다. 1995년 2월에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추진위원회(세추위)'가 '법률서비스 및 법학 교육의 세계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이 본격적인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세추위는 사법시험 합격자 인원을 연차적으로 증원하는 것만 결정하고, 법률가양성제도에 관해서는 계속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히는데 그쳤다.

로스쿨 관련 논의는 1998년 7월에 발족한 김대중 정부의 대통령 자문기구인 '새교육 공동체위원회(새교위)'에서 재개되었다. 새교위 산하에 법학교육제도연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 위원회는 법학대학원의 설치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학사(學士) 후 법학 교육'의 도입을 주장했다. 반면 이듬해인 1999년 5월에 구성된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는 2000년 5월 '로스쿨 도입'을 배척하고 대법원이 관장하는 '한국사법대학원(가칭)'으로 사법연수원을 개편할 것을 제안하였다.

결국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 로스쿨 도입은 법학교육 개혁 또는 법률가양성 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기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로스쿨 도입 논의는 청와대와 대법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2003년 10월에 대법원에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가 설치된 노무현 정부때 전환기를 맞았다. 사개위는 2004년 12월에 채택한 '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에서 로스쿨 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비록 사개위에 참여한 위원들 중에 로스쿨 도입 반대 주장을 펼치던 위원들이 있었지만, 사개위를 운영한 대법원의 입장이 도입 찬성 또는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일부 위원들의 반대의견이 대세를 바꿀 수 없었다.

사개위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내렸지만, 국회 문턱을 넘을 때까지 약 2년 6개월 가량의 시간이 더 걸렸고, 로스쿨을 로스쿨답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충입학 정원 결정이나 변호사시험제도 설계를 두고서는 2009년까지도 논쟁이 이어졌

1) 이 글은 2015년 10월 12일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최한 세미나 <법학전문대학원 성과와 제도개선>에서 발표한 같은 제목의 글에서 최근 통계를 보충하고 내용을 보완한 글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진입장벽 완화 수단으로서의 특별전형제도: 그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崔 裕 卿**

I. 들어가며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학전문대학원법」)이 제정된 이래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어 운영된 지 7년이 지났다. 이로써 종래 ‘시험’을 통한 소수의 법조인 선발 제도는 ‘교육’을 통한 법률가¹⁾ 양성 체제로 전환되었으며²⁾ 최근 제8회 신입생을 선발하고 제5회 변호사시험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둘러싼 이해대립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을 뿐 아니라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원색적인 비방³⁾과 갈등으로 치달고 있다.⁴⁾ 법학전문대학원은 석사전문대학원으로 학사학위⁵⁾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지원할 수 있고, 각 법학전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 제56권 제4호 2015년 12월 223~262면에 게재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LL.M. & J.S.D.).

- 1) 이 글에서 필자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다변화되고 있는 법 전문직(legal profession)의 분화 현상을 정확히 기술하는 개념으로 ‘법조인’ 개념에 갈음하여 ‘법률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의식적으로 ‘법조인’이라는 개념을 지양하고 ‘법률가’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한 대표적인 초기 논문으로는 한상희, “(법률가 충원제도의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변호사의 적정수” **법과 사회**, 제11권(1995), 38-70면이 있으며 그 외에 이국운, “법률가집단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법률가 양성제도의 개혁 문제를 화두로 삼아”, **한국의 현상과 인식**, 통권 제79호(1999), 199-139면 및 동 저자, “한국 법률가의 탄생 공간”, **저스티스**, 통권 제67호(2002), 154-174면, 한인섭, “왜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인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박영사(2002); 김종철, “법학교육과 법률가 양성제도 개혁의 방안: 개혁의 하드웨어적 측면”, **법과 사회**, 제24권(2003), 55-81면; 한인섭, “변호사의 직업윤리의 정립과 교육: 기초발제: 법조비리와 법률가 윤리”, **법과 사회**, 제29권(2005), 9-19면; 김창록·이진국, “사법개혁 논의과정에서의 법률가직역간의 갈등구조 - ‘로스쿨’ 제도 도입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형사정책연구원(2005) 등이 있다. 최근 연구로는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과 법학연구소가 수행한 「2014 대한민국 법률 직역의 구조와 법률가 의식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이재협·이준웅·황현정, “로스쿨 출신 법률가, 그들은 누구인가? -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56권 제2호(2015. 6), 367-411면도 참조.
- 2) 법조인양성제도 개혁과정은 김선수, **사법개혁 리포트**, 박영사(2008); 김창록, **로스쿨을 주장하다: 한국로스쿨 탄생의 기록**, 유니스토리(2013), 367-411면 참조.
- 3) 예를 들어 사법시험을 이른바 ‘희망의 사다리’ 또는 ‘개천의 용’을 탄생시키는 제도에 비유하는 데 비해 법학전문대학원을 ‘돈스쿨’, ‘현대판 음서제’로 폄하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양극화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 4) 2015년 12월 현재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하는 3개의 사법시험법 법률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최근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사법고시를 2021년까지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표명(2015. 12. 3)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전면 자퇴를 결의하고,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은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변호사시험 출제 등을 거부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하고 있다. **법률신문**, 2015년 12월 7일자, “로스쿨 학생들 ‘법무부 사과’ 촉구 ‘전면 자퇴’ 강행”; **헤럴드경제**, 2015년 12월 10일자, “[사시폐지 유예 발표 일주일②] 두 쪽으로 갈라진 법조계… 소송 전 비화조짐까지”; **연합뉴스**, 2015년 12월 7일자, “시위·고발·삭발… 법조계 사시-로스쿨 ‘혈투’”; **국제신문**, 2015년 12월 14일자, “깊어지는 사시 갈등… 로스쿨 재학생 1000명, 검사 첫 단추 기말시험 응시거부” 등 참조.
- 5)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2조 이때 학사학위란 반드시 정규 대학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방송통신대, 독학사, 또는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취득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별지12]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개인인 경우)

계약자	발주처	손혜원 의원실	
	계약 상대자	· 주민등록번호 : · 성명 : 최유경 · 주소 : · 주민등록번호 : · 소속 및 직위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 직장 및 자택전화번호 : - 직장 : · H·P번호 : · 통장계좌번호 : · 예금주명 : · 은행명 :	
계약내용	용역명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8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책 연구	
	계약금액	일금 이십만원(₩200,000원)	
	계약기간	2016. 9. 26. ~ 2016. 10. 14.	
	기타 사항	◆첨부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개인 통장사본 1부, <u>여론조사개요 or 연구용역보고서 1부,</u> <u>용역결과물 1부(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 번역 결과물 각 1부)</u> ◆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 (가타소득세: 사례금의 4% 지방소득세: 가타소득세의 10% 원천징수 후 입금)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10. 25.

국회의원 손혜원

[작성자 이슬기 (서명)]



[양식]

연구용역보고서

1. 목 적¹⁾

-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8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책을 도출하고자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함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혜원 의원실의 국정감사 정책보고서에 수록될 예정임

2. 계약 내용

- 계약기간 : 2016.9.26. ~ 2016.10.14
- 연 구 자²⁾ : 최유경,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3. 주요 내용³⁾

2009년부터 시행된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불가피한 고비용 교육구조를 취하게 됨으로써 총입학정원 가운데 일정한 비율을 신체적·경제적 취약계층 및 사회·문화적 취약계층에게 할당하는 이른바 특별전형제도가 정책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는 법률가양성 제도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법률가집단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궁극적으로 사법접근권(access to justice)에 대한 형평성과 신뢰도 제고를 추구하는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지난 7년간 특별전형 입학자는 총입학정원의 약 6.14%로, 제1회부터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약 5.1%를 차지했다. 이들은 로펌과 개인변호사 사무실을 비롯해 사기업과 공공영역 등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과소대표되고 있는 계층을 충분히 포섭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 특별전형제도는 각 법학전문대학원 별로 복잡하고 상이한 세부유형과 기준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법학전문대학원들이 특별전형

1) 연구용역의 취지나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연구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기재

3) 연구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거나 목차 등을 기재

지원자들이 제출하는 각종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 확인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 특별전형제도가 고비용 교육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설계된 점을 고려한다면, 신체적 취약계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제적 취약성'을 기준으로 통일적인 유형과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소득' 지표 외에 지역, 부(富), 가족의 교육력(教育歷), 중·고등교육정보 등 보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표를 개발하여 법학전문대학원들의 자율적인 학생선발권을 보장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나아가 특별전형제도 운영과정상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특별전형 지원자에 대한 일차적인 관리·심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진위 조사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때이다.

[별지12]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개인인 경우)

계약자	발주처	손혜원 의원실
	계약상대자	· 성명 : 한무영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소속 및 직위 : 서울대학교 빛물연구센터 센터장 · 직장 및 자택전화번호 : - 직장 : · H·P번호 : · 통장계좌번호 : · 예금주명 : · 은행명 :
계약내용	용역명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물관리 대안 - 울산시 물문제 해결방안 연구
	계약금액	일금 오백만원(₩5,000,000원)
	계약기간	2016. 8. 1. ~ 2016. 10. 1.
	기타사항	◆첨부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개인 통장사본 1부, <u>여론조사개요 or 연구용역보고서 1부,</u> <u>용역결과물 1부(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 번역 결과물 각 1부)</u> ◆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 (가타소득세: 사례금의 4% 지방소득세: 가타소득세의 10% 원천징수 후 입금)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접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10. 25.

국회의원 손혜원

[작성자 이슬기 (서명)]



연구용역보고서

1. 목 적¹⁾

본 연구에서는 울산시의 반구대 암각화 보존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이를 통한 울산의 미래 물문제까지 해결하고자 하였다. 울산의 물 문제를 기존의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공급중심의 관리방식이 아닌 수요중심의 관리방식과 빗물이용확대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였다.

2. 계약 내용

- 계약기간 : 2016.08.01. ~ 2016.10.01
- 연 구 자²⁾ : 서울대학교 빗물연구센터 한무영 센터장

3. 주요 내용³⁾

본 연구에서는 울산시의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공급을 늘리는 공급관리중심의 물관리보다 현재의 공급량을 유지하면서 수요량을 절감하는 수요관리중심의 물관리를 지향하였다. 공급관리중심의 물관리는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시설을 계속 확충해야 하며 수원의 유한함으로 인해 시설을 확충하는 대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반면 수요관리중심의 물관리의 경우 절수를 통해 공급량을 맞추게 되므로 기후변화에 큰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수원을 확보하는 것과 같다. 또한 빗물을 활용하여 기존의 공급량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비가 올 때마다 쉽게 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빗물집수방식을 채택하였다.

공업도시로 성장하기 시작한 울산시는 1980년대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공업도시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2010년에 이르러서는 그동안 지향하였던 공업도시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친환경도시의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경험에 있다. 이제 더 한 단계 나아가서 2020년까지 울산시가 상수도 수요관리와 빗물관리를 통한 물관리를 통해 물관리 선도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다른 도시에서 물을 보조받는 도시에서 다른 도시에 물을 보조해주는 도시로 탈바꿈하는 국제적인 선도사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울산시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연구용역의 취지나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연구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기재

3) 연구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거나 목차 등을 기재

울산시 물문제 해결방안 연구 용역

연구보고서

2016. 10.

서울대학교 빗물연구센터

[별지12]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개인인 경우)

계 약 자	발주처	손혜원 의원실	
	계약 상대자	· 성명 : 최승진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소속 및 직위 : 성균관대학교 거버넌스 연구센터 · 직장 및 자택전화번호 : - 직장 : · H·P번호 : · 통장계좌번호 : · 예금주명 : · 은행명 :	
계 약 내 용	용역명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따른 대한민국 관료집단의 직업적·전문가적 윤리수준 강화와 입법부를 통한 외적통제 강화의 필요성 논의	
	계약 금액	일금 오백만원(₩5,000,000원)	
	계약 기간	2016. 10. 1 ~ 2016. 12. 19	
	기타 사항	◆첨부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개인 통장사본 1부, <u>여론조사개요 or 연구용역보고서 1부,</u> <u>용역결과물 1부(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 번역 결과물 각 1부)</u> ◆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 (기타소득세: 사례금의 4% 지방소득세: 기타소득세의 10% 원천징수 후 입금)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12. 23.

국회의원 손 혜 원



[작성자 이 슬 기 (서명)]

연구용역보고서

1. 목 적¹⁾

본 연구에서는 관료제의 의미를 재탐색해보고 특히, 관료제와 관료제간의 관계에 대해 기존에 많이 논의되지 않던 시각을 소개하고 함.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이에 관련돼 있는 관료들의 행태를 분석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대한민국 관료들이 어떻게 행정행위를 했으며,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살펴보고자 함. 최종적으로 공직자들이 국정농단에 개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그 폐단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지와 관련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계약 내용

- 계약기간 : 2016.10.01. ~ 2016.12.19
- 연 구 자²⁾ : 행정학 박사 최승진

3. 주요 내용³⁾

본 연구를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주관적 판단 없는 관료들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살펴봄. 사례분석을 통해 관료제의 병리현상이 관료제의 구조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고, 관료제에 소속되어 있는 관료들의 행태에 의해서도 생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관료제와 관료 간 관계에 대한 전통적 시각과 양자 간 불일치 가능성에 근거한 시각을 종합해서 살펴볼 수 있음. 관료제에 필수적인 3가지 특성 중 반주관성이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공직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음. 결국 국정농단도 공직자의 윤리적 책임을 담보한다면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일임. 그러므로 공직자의 행정책임을 달성하기 위해 자율적인 관료의 행태 변화가 필요하나 당장 가시적인 행정책임 확보도 무시할 수 없음.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기능 강화야말로 가장 큰 통제수단이 될 것임. 두 번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를 통해 공직자의 책임을 확보할 수 있음.

1) 연구용역의 취지나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연구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기재

3) 연구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거나 목차 등을 기재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따른
대한민국 관료집단의 직업적·전문가적
윤리수준 강화와 입법부를 통한 외적통제
강화의 필요성 논의

2016. 12. 19

최 승 진

행정학 박사

성균관대학교 거버넌스 연구센터